

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⑦

신청기관

기획재정부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률 입법동향 분석

이진수 · 김미혜 · 차종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⑦

신청기관

기획재정부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률 입법동향 분석

이진수·김미혜·차종진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률 입법동향 분석

A Study on the Trend of the Budget-Related Bill in 19th National Assembly

연구자 : 이진수(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Lee, Jin-Soo

김미혜(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Kim, Mi-Hye

차종진(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Cha, Jong-Jin

2016. 11. 15.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은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의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상태를 압박할 수 있고, 대 국민 파급효과가 거대하며, 일단 잘 못 입안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의 소모적 낭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을 전수조사 함. 재정수반법안을 내용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어떤 분야와 어떠한 목적의 재정수요가 있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을 분석함
-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을 분석하여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이행수준 파악·분석함

II. 주요 내용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을 분석한 결과 제출된 총 5055개의 재정수반법안 중 사업법안이 3836건(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행정 법안이 2187건으로 가장 많은 수로 발의되었음. 이에 이어 조직법안이 698건으로 14%, 보장법안이 302건으로 6%, 보상법안이 219건으로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5055건의 재정수반법안 중 430건이 가결되어 9%의 가결율을 나타내었음. 이는 제19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율인 15.7%를 상당히 하회하는 비율임. 미통과된 법안 중 3094건(61.2%)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1316건(26.0%)이 대안반영폐기 되었음.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과반수이상이 소관위원회에서의 미진한 심리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됨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이 제출된 소관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총 713건이 제출되었음. 이 중 사업법안이 562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 703건, 교통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690건의 비교적 많은 수의 법안이 제출되었음.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9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3건, 지식경제위원회에 2건이 제출되는 등 상대적으로 미비한 제출실적을 보이고 있음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총 5055건 중 1124건으로 22.3%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거의 3배에 가까운 3085건(61.0%)의 법안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음

Ⅲ. 기대효과

-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이행수준을 파악하여 법안비용추계 관련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제출 동향을 분석하여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수반법안의 발전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추계제도, 비용추계서, 보장법안, 보상법안, 사업법안, 조직법안

Abstract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budget-related law would oppress the national economy, because it expends national finances and has a great ripple effect to the public. Also if a erroneous law is enforced, it would waste the finance. So an effective legislation management needs to be establishment.
- This study investigates all budget-related bills which have propo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classifies them by each contents. With thi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e examine budget-related bills trends.
- This study also makes an analysis the implement level of the mandatory submission system of cost estimates report on the bills by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II . Major Content

- On the analyzed result, the total number of budget-related bills propo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is 5055 and of that business-related bills is 3836(76%). The number of administra-

tion-related bills which are related to the national defense, diplomacy, public order and public administration is 2187. In the next breath,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related bills is 698(14%). The number of social security-related bills is 302(6%) and the number of compensation-related bills is 219(4%).

- Among 5055 budget-related bills propo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number of approved bills is 430(9%). This is less than the rate of whole approved bills which is 15.7%. Among the unapproved bills, 3094 cases(61.2%) are caused by the expiration and 1316 cases(26.0%) are repealed by the counterproposal. The majority of budget-related bills repealed by the expiration would be abrogated by unexhausted examinations of the remit committees.

- Among 5055 budget-related bills, the committee which has took the greatest number of bills is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The number of bills is 713. Among this, business-related bills have the largest proportion. The number of bills is 562. In sequence, 703 bills were submitted to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690 bills were submitted to Transportation and Culture Committee. On the other hand Culture and Sport Committee received 9 bills,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received 3 bills and Knowledge Economy Committee received 2 bills. They are relatively infrequent.

- Among 5055 budget-related bills, the number of bills attached cost estimates reports is 1124(22.3%). 3085 bills(61.0%) were submitted attached the statement of reasons. This is almost three times than the number of bills attached cost estimates reports.

III. Expected Effects

- The implement level of the mandatory submission system of cost estimates report on the bills can be confirmed by the investigation of all budget-related bills. Also this helps a policy making.
- By the classification of bills, the trend of lawmaking can be examined thoroughly. The development way can be found based on the examination.

➤ **Key Words :** 19th National Assembly, the budget-related bill, the mandatory submission system of cost estimates report on the bills, Business-related bills, Social Security-related bills, Compensation-related bills, administrative organization-related bill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II. 연구의 목적	14
III. 선행연구	15
IV. 분석방법	17
1. 기초 데이터의 분류	17
2. 통계적 분석	18
V. 분석기준	18
1. 법안비용추계서	18
2.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분류	24
제 2 장 분 석	29
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전체 입법 동향	29
1. 개 요	29
2. 제안자별 법안제출 현황 : 정부/위원회(위원장)/의원	29
3. 가결여부	30
4. 비용추계서	32
5. 소관위원회	34
6. 법안유형	35

7. 소 결	35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	37
1. 개 요	37
2. 전체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38
3. 제안자별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	
정부/위원회(위원장)/의원	39
4. 가결 또는 미통과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42
5. 소관위원회별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44
6. 법안유형별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57
7. 소 결	74
I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유형별 동향	77
1. 제19대 국회 제출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	77
2. 보상법안 입법동향	78
3. 보장법안 입법동향	86
4. 사업법안 입법동향	94
5. 조직법안 입법동향	103
6. 소 결	112
IV. 결론 : 종합분석	116
1. 법안 내용에 따른 유형별 입법동향	116
2. 법안 내용에 따른 유형별 가결동향	117
3. 해당 소관위원회 제출 동향	118
4. 법안 내용에 따른 유형별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20
참 고 문 헌	123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적절히 통제하고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요소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1970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국회법에 반영되었지만, 제16대 국회까지는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되지 않았고, 17대 국회에서 본격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법안비용추계제도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국회회기가 지난시점에서 본 제도의 실효적 이행상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탐지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고, 제도발전추이를 추적하기 위하여 재정수반법안의 지속적인 시계열적분석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의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법률 간의 내용적 유사성을 분석하여 명확한 분류기준을 확립하고, 각 목적별 법안의 통과현황을 파악하여 입법추진의 목적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과 지속적인 연구결과물의 축적은 사회적 법치 국가이론의 강화와 함께 도시화, 산업화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법의 형태로 양산되는 현상과 그에 따라 정부 규모는 비대해지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은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의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상태를 압박할 수도 있고, 대 국민 파급효과가 거대하며, 일단 잘 못 입안된 정책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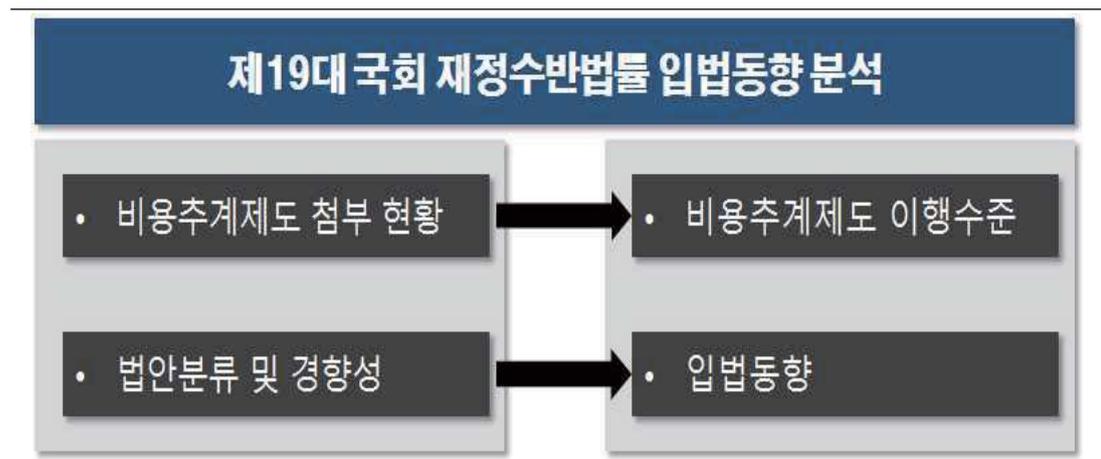
행될 경우 국가재정의 소모적 낭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을 조사·분석하여 실증적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II.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률을 전수 조사·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의 동향을 파악·분석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분야와 어떠한 목적의 재정수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입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는 입법 동향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발전 방향성을 탐지하여 미래의 재정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에서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이행정도를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법안비용추계제도에 관한 정책적·입법적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2012) ▪ 연구자 : 국회예산정책처 ▪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비용추계의 원리와 기법 소개 - 실제사례를 통한 법안 비용추계의 전반적 과정의 이해를 위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 및 연혁 등 개괄적 검토 ▪ 법안비용추계의 원리 및 방법 검토 ▪ 법안의 유형의 정립과 유형에 따른 다양한 접근방식의 실제 추계사례 소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법안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국회의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연구(2012) ▪ 연구자 : 국회예산정책처 ▪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추계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 설문조사를 통한 제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파악 - 제도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실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현황 파악 ▪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 법안비용추계제도에 관한 일반 사항, 속성, 작성기관, 활용, 첨부시기,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인식 조사 실시 ▪ 인식조사결과의 분석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개발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법안 비용추계 기능 강화방안(2009) ▪ 연구자 : 국회예산정책처 ▪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추계관련 법규에 대한 분석 - 법안비용추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비교법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입법과정과 법안추계제도 검토 ▪ 법안비용추계제도의 개관 및 각국의 법안비용추계제도 검토 ▪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의 법률안 비용추계 분석 ▪ 정부제출법안 비용추계의 문제점 검토 ▪ 개선방안 도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1970년도에 최초 도입된 법안비용추계제도가 제17대, 제18대를 거쳐 제19대에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다.

나아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재정수반법안을 비용추계서의 첨부 및 법안의 내용별 분류 등 다각적인 분류기준을 정립하여 제19대 국회에서의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재정수요에 대한 합리적 판단자료를 생산한다.

IV. 분석방법

1. 기초 데이터의 분류

1) EXCEL 데이터 활용

본 연구의 대상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으로, 현재 5055개의 재정수반법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이를 전수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 비용추계서 유무
- 가결여부
- 소관위원회
- 법안유형(대분류)
- 법안유형(소분류)

비용추계서의 유무에 관한 분석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여부를 분석하고, 비용추계제도의 이행수준을 확인한다.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을 내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19대 국회에서 재정수반법률의 입법동향을 분석한다.

2) ACCESS 데이터 활용

재정수반내용과 내용별 분류기준을 통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CCE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법안유형 및 세부유형을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상세하게 분류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다.

No	법안명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소관위원회	
김우남 의원 등 17인	안전행정위원회	
의안번호	법안유형	세부유형
0004	보상법안	위로보상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명시함(안 제8조의2).나.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안 제8조의3 신설).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안전행정부에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위한 신고처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함(안 제10조).		
재정수반내용		
제주4·3 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에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위한 신고처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측됨		

2. 통계적 분석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발전경향을 탐지하고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행수준을 확인한다.

V. 분석기준

1. 법안비용추계서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법안이 입법될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입법영향평가와 그 의의를

같이한다. 그러나 법안비용추계제도는 대상적으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내용적으로는 재정적 영향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시간적으로는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입법영향평가와 구별된다.¹⁾ 본 제도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적절히 통제하고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²⁾

이때 법안비용추계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³⁾ 본 제도는 법안의 입안단계에서 가결되어 시행될 경우의 소요 재정, 가용성, 재정조달 및 재정주체에 미치는 영향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며, 결국에는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법안비용추계제도의 기능은 i) 재정건전성 확보, ii) 법안집행의 실효성 보장, iii)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 iv)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⁴⁾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연혁

1973년 우리나라는 재정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 예산명세서를 첨부토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법안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제도

1) 이에 관하여는 정영진,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회의회학회보 제2호, 2012, 116쪽 이하;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12쪽 이하 참조.

2) 국회예산처, 앞의 책, 11쪽.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4) 주영진, 국회법론, 2012, 288쪽.

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하여 제13대국회부터 제16대국회까지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3,171건 중 121건(3.8%)의 법안만이 예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었다.

2000년도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정부제출 법안의 경우에도 재정소요 추계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03년까지 법안 651건과 대통령령안 1,533건 중 단 24건만이 재정소요 추계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⁵⁾

법안비용추계제도는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를 신설한 「국회법」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동법에 따라 200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법안비용추계를 시작하였다. 나아가 2005년에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수반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였고, 정부가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에 추가하여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할 것을 규정하였다. 국회법에서 정한 법안비용추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35호)」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594호)」이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정부제출법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였고, 2011년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수반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66조의 3을 신설하였다.

3) 법적 근거

현행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아래 표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갖는다.

5) 정영진, 앞의 글, 118쪽; 임명현, 입법관리의 실태 및 효율화 방안, 법제연구 통권 제27호, 2004, 219쪽.

법 률	내 용
<p>국회법 제79조의2</p>	<p>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p> <p>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p> <p>③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본조신설 2005.7.28.]</p>
<p>국회예산 정책처법 제3조</p>	<p>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제1장 서론

법 률	내 용
<p>국가재정법 제87조</p>	<p>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 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p>
<p>지방자치법 제63조의3</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위의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35호)」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594호)」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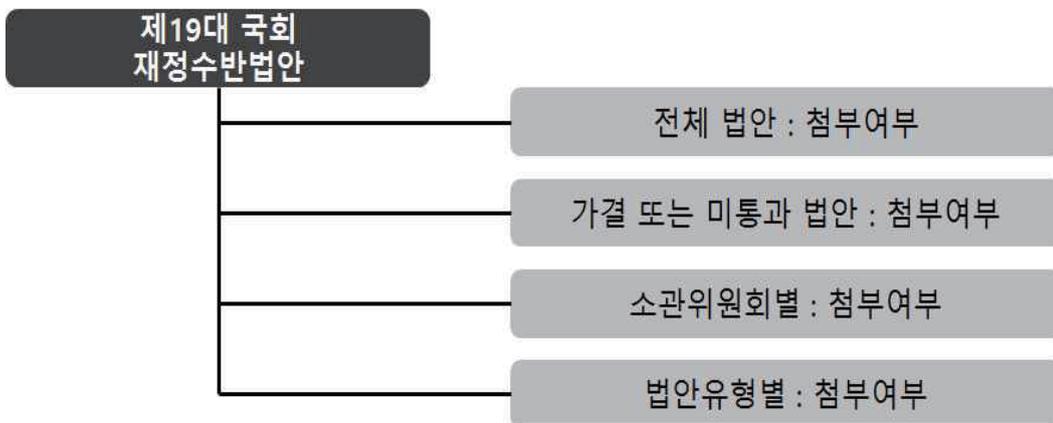
특히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35호)」 제3조 제3항에서는 원칙적인 비용추계서제출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따라서 재정수반법안의 경우에도 위의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분류방법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에서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비용추계제도의 이행수준을 살펴본다. 조사대상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5055개의 재정수반법안이며, 이를 전체 법안에서의 첨부여부, 가결 또는 미통과 법안에서의 첨부여부, 해당 소관위원회별 첨부여부 및 법안유형별 첨부여부로 나누어 분석한다.



위의 분류방법 중 법안유형별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19대 국회에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을 내용과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분류

본 연구에서는 19대 국회에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을 내용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수반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분류하여 재정수반법안의 입법 경향성을 탐지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수반법안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보장법안, 보상법안, 조직법안 및 사업법안의 4가지로 분류한다. 이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수반법안의 추계접근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된 분류방식이다.⁶⁾

1) 보장법안

보장법안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안이다.⁷⁾ 보장법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법에서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반영구적인 재정보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인구의 증감, 경제여건의 변화, 사회적·거시적 변수 등이 대상자의 수 및 지원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도별 재정소요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여 향후 발전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보장법안의 범주에는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 등에 관한 법안이 포함된다.

공적부조법안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국민에게 국가의 세금을 무상원조하는 성격을 갖는 법안으로,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

6)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91쪽.

7)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93쪽.

장법」등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법안, 「의료급여법」등 의료수급과 관련된 법안 및 「기초연금법」등 노령연금과 관련된 법안들이 예시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이외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적부조 분야와 구별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분야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지혜택 등을 전달하는 국가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법안으로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및 생존 부양자에 대한 생활보장과 사망 및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한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운용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업이다.⁹⁾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공무원연금법」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보상법안

보상법안은 위법·적법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개인이 당한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 또는 손실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미한다.¹⁰⁾ 보상법안은 다시 그 내용에 따라 손실보상, 위로보상 및 공로보상으로 구분된다.

8)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102쪽.

9)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123쪽.

10)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131쪽.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가해진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의미한다. 손실보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토지매수나 이주정착금과 같이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보하는 ‘피해보상’, 각종 직불제 등과 같이 산업 구조조정으로 야기되는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구조조정보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일정한 국가에 대한 공헌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가족에 대하여 보훈의 의미로 보상하는 법안은 내용상 공로보상법안에 속한다. 공로보상법안의 경우 손해의 발생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헌’에 방점이 찍힌다.

보상법안의 마지막 유형으로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개인의 손해를 전보하는 법안인 위로보상이 있다. 위로보상은 국가의 위법여부, 과실여부나 국가에 대한 공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3) 조직법안

조직법안은 정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식적 조직의 신설 또는 확대에 관한 내용을 갖는 법안이다.¹¹⁾ 조직이 신설 또는 확대되는 경우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 취득비, 사무공간확보비용, 기본사업비 등과 같이 재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에선 대표적으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속한다. 이외에 법안에서 관서나 그 소속(기관)이 아닌 조직을 설립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11)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146쪽.

4) 사업법안

사업법안은 공공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규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분류에 따르면 법안의 내용 및 성격 상 보장, 보상, 조직법안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은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외의 모든 재정수반법안을 사업법안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사회, 산업 및 행정법안으로 세분화하였다.

사회법안은 앞서 분류한 사회보장, 보상 및 조직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나, 앞선 분류기준을 제외한 사서교사, 보육교사, 새터민전문상담사, 장애인 체육교사 등 전문인력지원과 각종 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함한다.

산업법안은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산업 및 기술,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획재정, 금융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포함한다.¹³⁾

행정법안은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공무원 증원 및 정보시스템 등의 내용을 수반하는 법안으로 분류한다.

위의 내용을 도식화 하면 아래 표와 같다.

법안유형	세부유형	구분기준
보 장	공적부조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탈북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급부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취약계층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급부

12)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155쪽.

13)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163쪽.

제1장 서론

법안유형	세부유형	구분기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 상	손실보상	국가정책으로 재산 또는 재산외의 손실이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수용에 대한 보상(토지매수/이주정착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각종 직불제)
	공로보상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
	위로보상	국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거사 본인/유족 보상),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범죄피해자 구조, 의사상자 구조)
조 직	조직설립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사무기구 있는 경우만), 소속(산하)기관, 법인 등의 설립 및 운영. 단, 특정 사업을 위한 추진단, 센터, 협회, 재단, 전시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업법안으로 분류
	조직운영	조직운영을 위한 소규모 경상적인 기본사업
사 업	사회	교육 및 보건·복지·노동, 문화·체육·관광, 환경과 관련된 사업
	산업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산업 및 기술,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과 관련된 사업(기획재정, 금융 포함)
	행정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사업

(출처 :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92쪽)

제 2 장 분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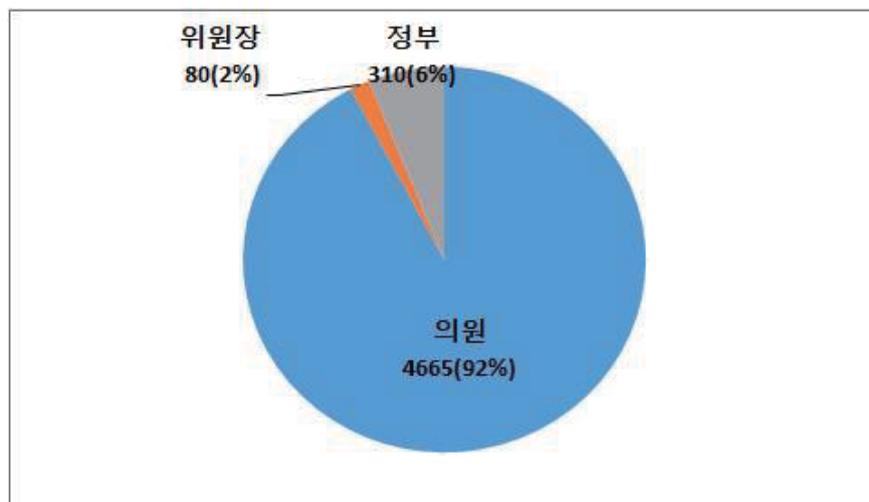
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전체 입법 동향

1. 개 요

본 장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의 전체적인 입법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총 5055개의 재정수반법안을 가결여부, 비용추계서 첨부여부, 해당 소관위원회 및 법안 내용에 따른 법안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제출된 법안의 가결수준, 비용추계제도의 이행수준, 해당 소관위원회의 유형 및 내용상의 입법 동향을 큰 틀에서 조망한다.

2. 제안자별 법안제출 현황 : 정부/위원회(위원장)/의원

<그림 2-1> 제출자별 법안제출 현황(유형별, n=5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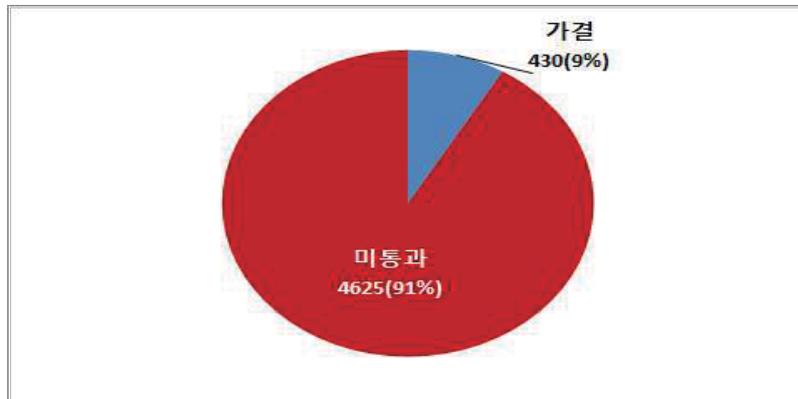
제2장 분석

제안자별 법안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이 총 4665건(92%)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310건(6%), 위원장 80건(2%) 순으로 나타났다.

3. 가결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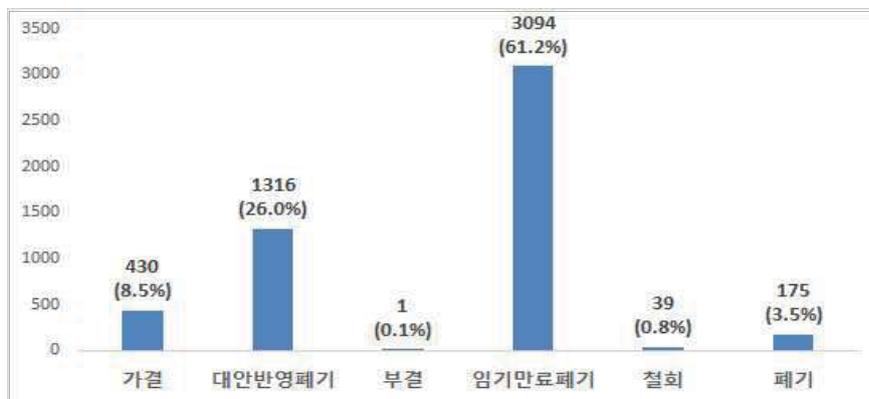
1) 전체법안 가결현황

<그림 2-2> 가결여부(n=5055)



전체법안 5055개 중 가결된 법안은 430건(9%), 미통과된 법안은 4625개(91%)로 나타났다.

<그림 2-3> 가결여부(유형별, n=5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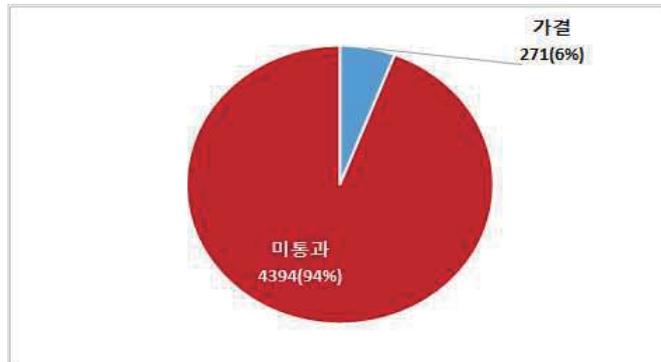
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전체 입법 동향

최종진행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기만으로 폐기된 법안이 3094개(61.2%), 대안반영폐기가 1316개(26.0%), 가결 430(8.5%), 폐기가 175(3.5%), 철회가 39개(0.8%), 부결 1개(0.1%)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제안자별 가결 또는 현황

가.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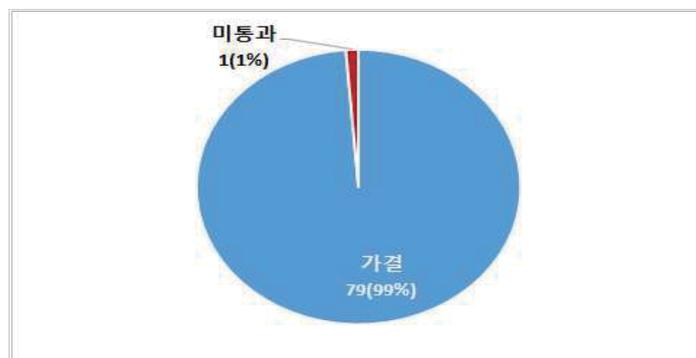
<그림 2-4> 의원발의 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4665)



의원제출 재정수반법안의 가결 또는 미통과 현황을 살펴보면, 가결 271개(6%) 법안, 미통과 4394개(94%) 법안으로 나타났다.

나. 위원장(위원회)

<그림 2-5> 위원장(위원회) 발의 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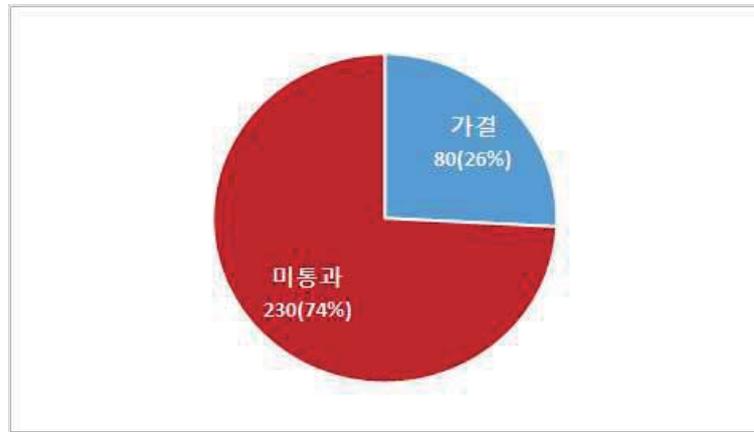


제2장 분석

위원장(위원회) 제출 재정수반법안의 가결 또는 미통과 현황을 살펴 보면, 가결 79개(99%) 법안, 미통과 1개(1%) 법안으로 나타났다.

다.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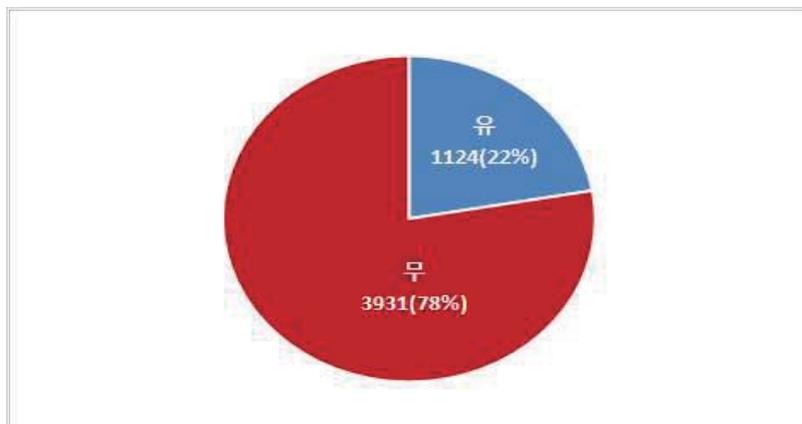
<그림 2-6> 정부발의 법안의 가결여부(유형별, n=310)



정부제출 재정수반법안의 가결 또는 미통과 현황을 살펴보면, 가결 80개(26%) 법안, 미통과 230개(74%) 법안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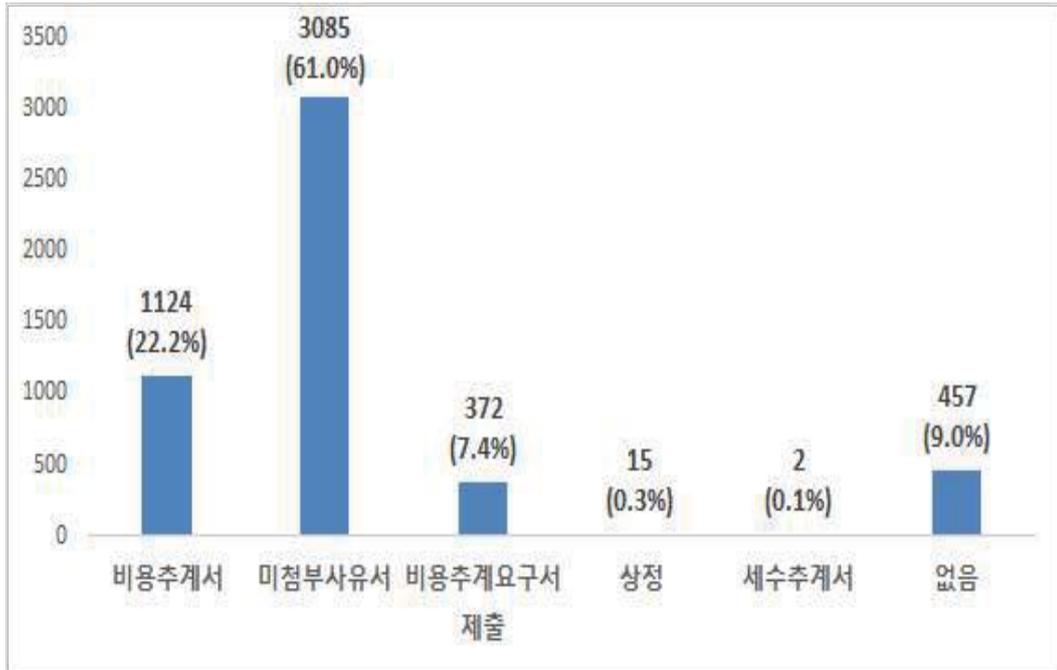
4. 비용추계서

<그림 2-7> 비용추계서 유/무(n=5055)



전체법안 5055개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1124개(22%)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3931개(7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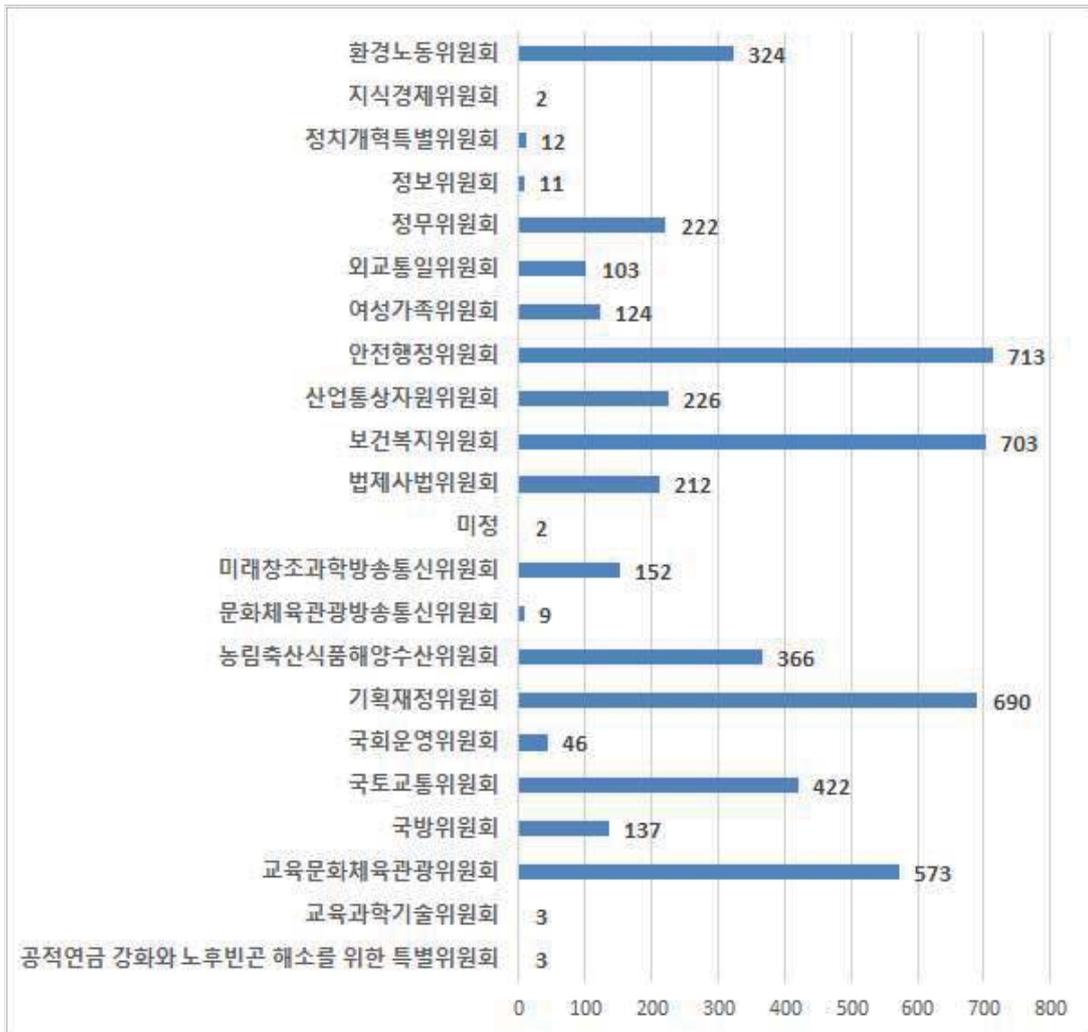
<그림 2-8>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5055)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3085개(61.0%),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1124개(22.2%), 없음 457개(9.0%), 비용추계요구서 제출이 372개(7.4%), 상정이 15개(0.3%), 세수추계서 제출이 2개(0.1%) 순으로 조사되었다.

5. 소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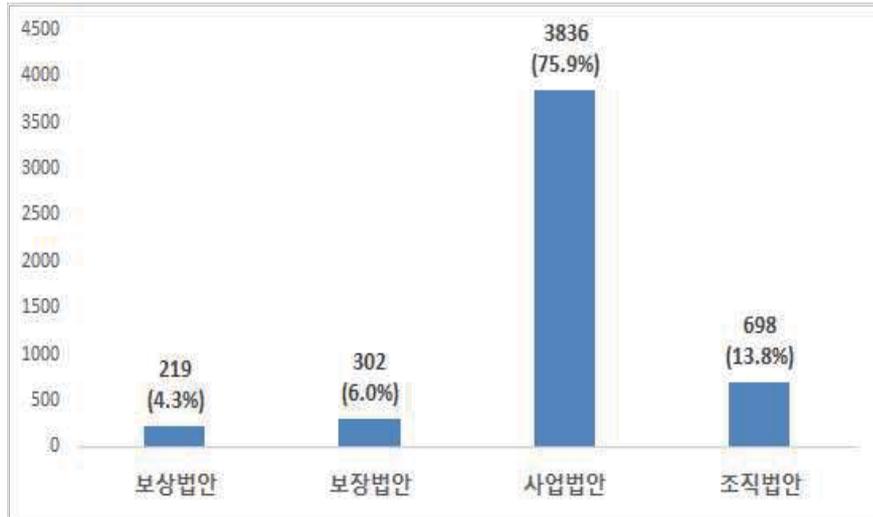
<그림 2-9> 소관위원회(n=5055)



전체 5055개 법안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안전행정위원회 713개, 보건복지위원회 703개, 기획재정위원회 690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73개 순으로 나타났다.

6. 법안유형

<그림 2-10> 전체법안유형(n=5055)



전체 5055개 법안을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법안이 3836개(75.9%)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법안 698개(13.8%), 보장법안 302개(6.0%), 보상법안 219개(4.3%)순으로 나타났다.

7. 소 결

1) 제19대 국회 발의 재정수반법안의 가결율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은 총 505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소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된 법안이 430건으로 조사되어, 가결율은 8.5%로 나타났다. 이는 제19대 국회 총 법안 가결율인 15.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통과 사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기만료폐기로 3094건(61.2%)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의 반이 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

제2장 분석

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됨이 없이 국회임기의 만료로 폐기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제19대 국회 발의 재정수반법안의 제안자별 제출·가결율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재정수반법안 중 92%(4665)가 의원발의 형식으로 제출되었고, 정부가 310건(6%), 위원회의 위원장이 80건(2%)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의원발의의 경우 94%(4394)가 미통과 되었으며, 반면에 위원장이 발의한 80건의 법안 중 79건이 가결되었으며, 정부 발의의 경우 평균가결율을 높게 상회하여 26%의 법안이 가결되었다.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이유는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대안반영되는 등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3) 제19대 국회 발의 재정수반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율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총 5055건의 재정수반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1124건(22.2%)으로 조사되었다. 3085건의 법안은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첨부사유서 제출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미첨부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대신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이 많은 점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미첨부 사유, 특히 제3호에서 정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가 넓게 인정되어 비용추계제도의 엄격한 시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장된다.¹⁴⁾

14) 김수옥, 법안비용추계 미첨부 요건 강화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1, 57쪽.

4) 제19대 국회 발의 재정수반법안의 소관위원회 분포

제19대 국회에서 재정수반법안이 500건 이상 제출된 소관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713건), 보건복지위원회(703건), 기획재정위원회(690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573건) 순이다.

5) 제19대 국회 발의 재정수반법안의 내용에 따른 법안유형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업법안(75.9%)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업법안이 사회사업(교육, 보건, 복지 등), 산업진흥(R&D, SOC 사업 등), 행정(국방, 공공질서, 안전 등) 등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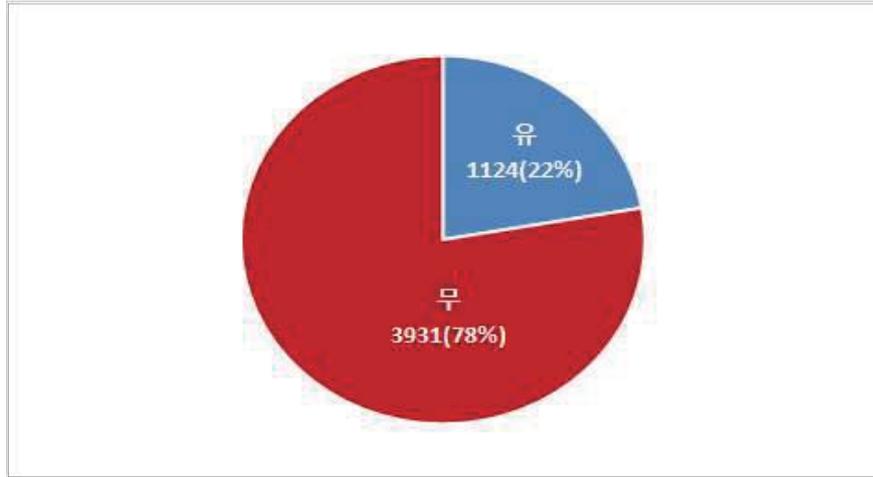
Ⅱ.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1. 개 요

본 장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에서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비용추계제도의 이행수준을 살펴본다. 조사대상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5055개의 재정수반법안이며, 이를 전체 법안에서의 첨부여부, 가결 또는 미통과된 법안에서의 첨부여부, 해당 소관위원회별 첨부여부 및 법안유형별 첨부여부로 나누어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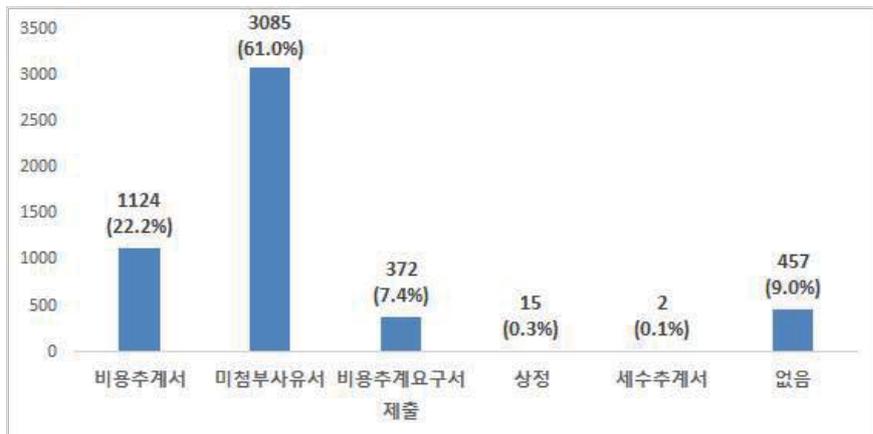
2. 전체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그림 2-11> 전체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5055)



전체법안 5055개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1124개(22%)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3931개(78%)로 나타났다.

<그림 2-12>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5055)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3085개(61.0%),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1124개(22.2%), 없음 457개(9.0%),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372개(7.4%), 상정 15개(0.3%), 세수추계서 2개(0.1%) 순으로 나타났다.

3. 제안자별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 정부/위원회(위원장)/의원

1)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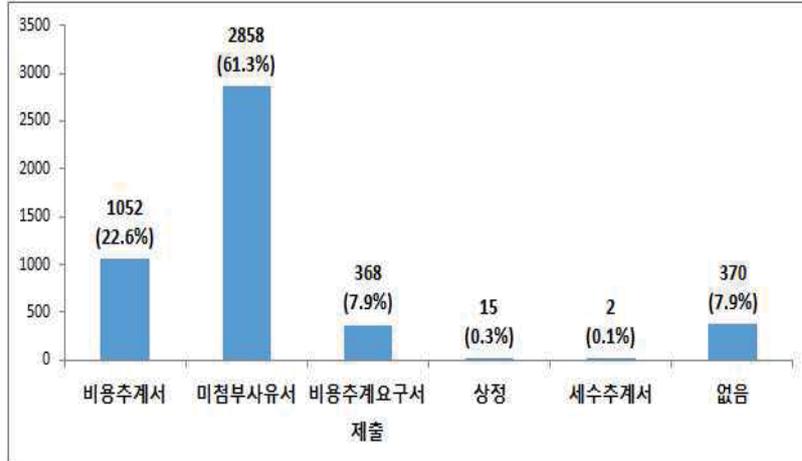
<그림 2-13> 의원발의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4665)



의원이 제출한 4665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1052개(23%)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3613개(77%)로 나타났다.

제 2 장 분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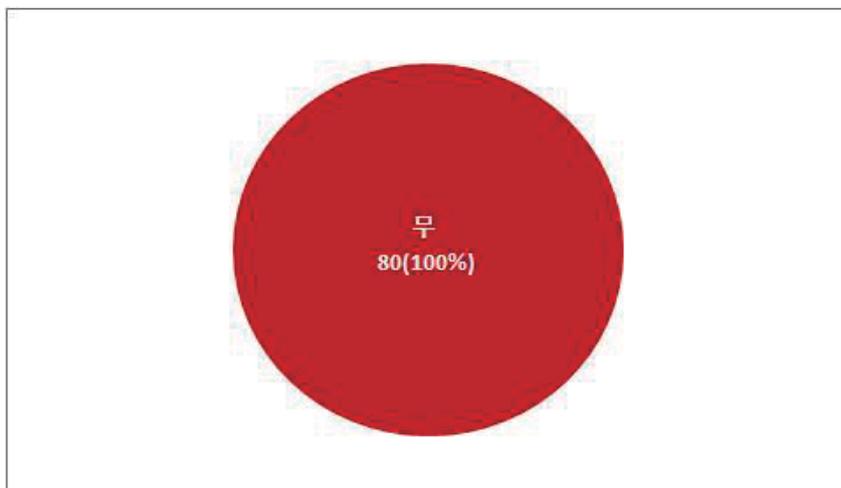
<그림 2-14> 의원발의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4665)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2858개(61.3%),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1052개(22.6%), 비용추계요구서 제출·없음이 각 370개(7.9%) 순으로 나타났다.

2)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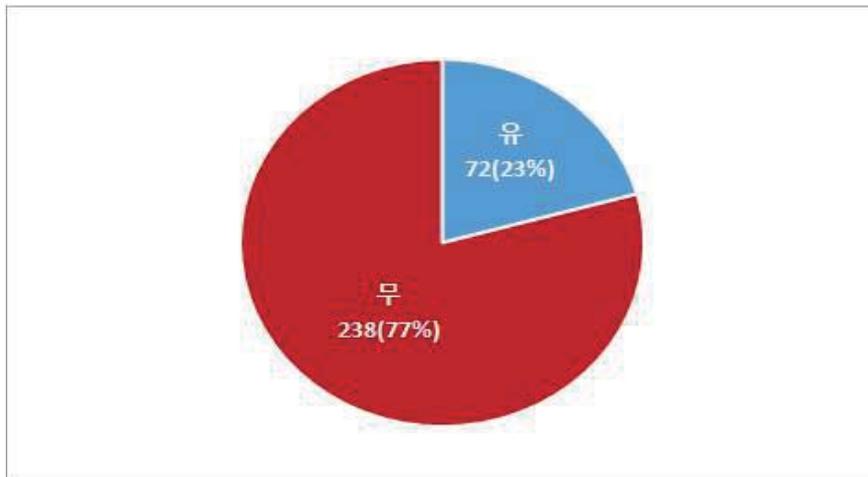
<그림 2-15> 위원장 발의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80)



위원장이 제출한 80개 법안 모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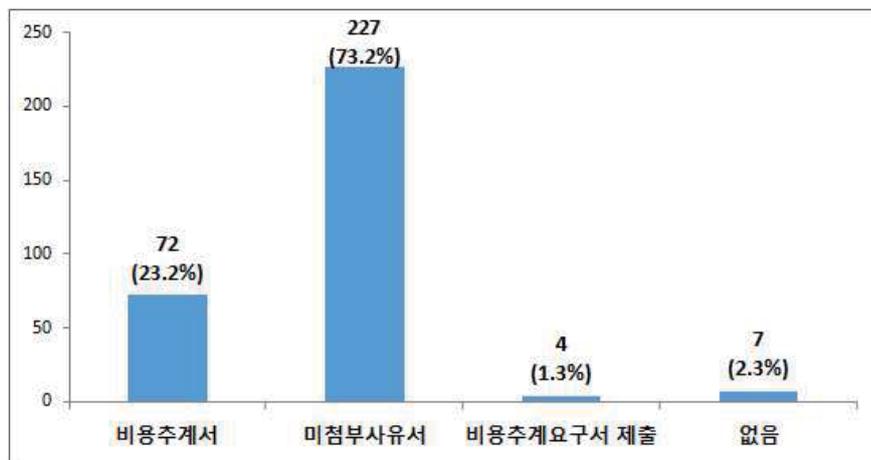
3) 정 부

<그림 2-16-1> 정부 발의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310)



정부가 제출한 310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72개 (23%)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238개(77%)로 나타났다.

<그림 2-16-2> 정부 발의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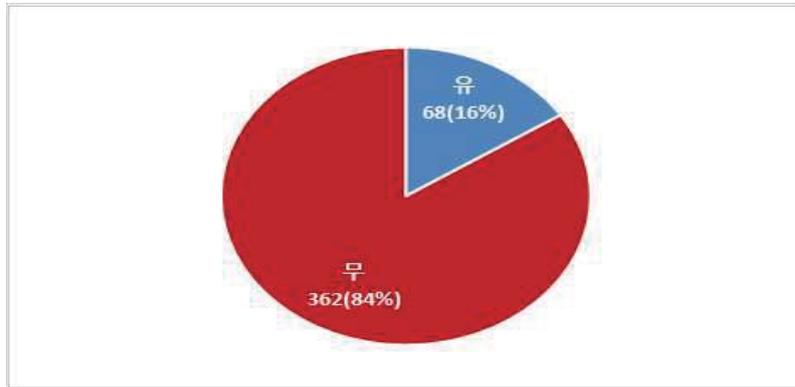
제 2 장 분 석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227개(73.2%),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72개(23.2%), 없음 7개(2.3%),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4개(1.3%)순으로 나타났다.

4. 가결 또는 미통과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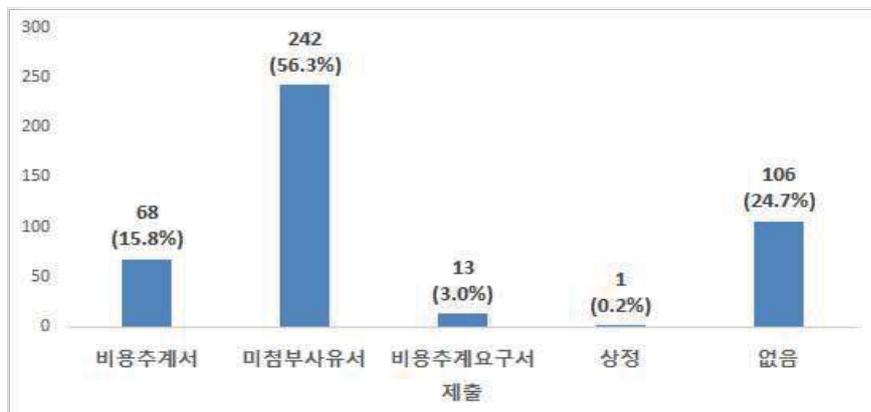
1) 가결 법안의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17> 가결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430)



가결 법안 430개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68개(16%)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362개(84%)였다.

<그림 2-18> 비용추계서 유/무(세부 유형별, n=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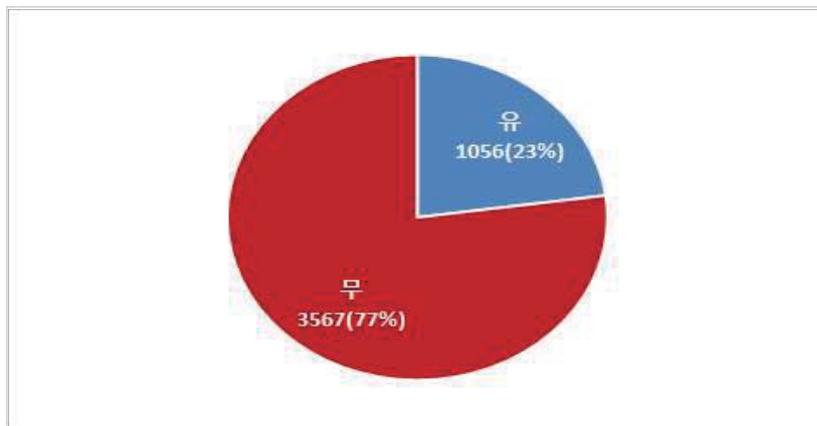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가결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142개(56.3%),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68개(15.8%), 없음 106개(24.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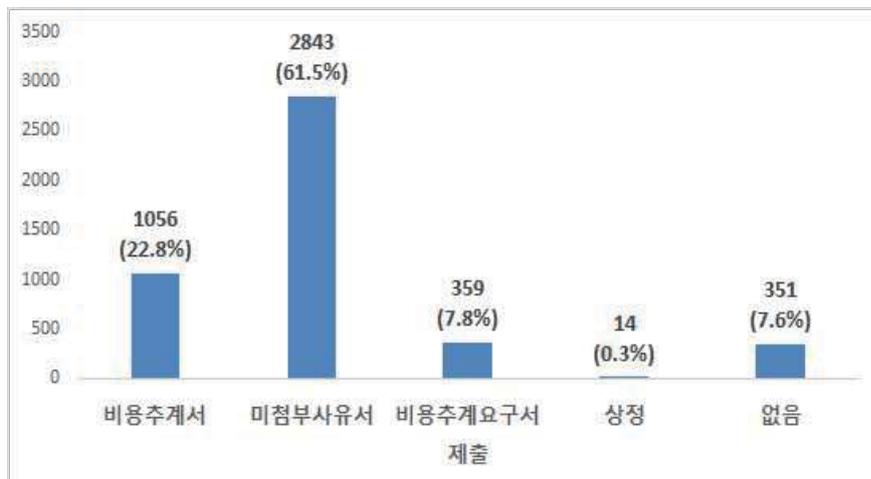
2) 미통과 법안의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19> 미통과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4623)



미통과 법안 4623개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1056개(23%)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3567개(77%)로 나타났다.

<그림 2-20> 비용추계서 유/무(세부 유형별, n=4623)



미통과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 사유서 제출 법안 2843개(61.5%),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1056개(22.8%),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359개(7.8%) 순으로 나타났다.

5. 소관위원회별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1)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표 2-1>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3		
	유	1개(33.3%)	
	무	2개(66.6%)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미첨부사유서
	1개(33.3%)	1개(33.3%)	1개(33.3%)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3개 중 1개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2개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중 1개의 법안은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1개의 법안은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표 2-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3	
	유	1개(33.3%)
	무	2개(66.6%)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개(33.3%)	2개(66.6%)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3개 중 1개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2개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2개의 법안은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 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573			
	유	98개(17.1%)		
	무	475개(82.9%)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없 음
	98개(17.1%)	412개(71.9%)	30개(5.2%)	33개(5.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573개 중 98개(17.1%)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475개(82.9%)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412개(71.9%)로 조사되었다.

4) 국방위원회

<표 2-4> 국방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국방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137				
	유	40개(29.2%)			
	무	97개(70.8%)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상정	없음
	40개 (29.2%)	74개 (54.0%)	13개 (9.5%)	2개(1.5%)	8개(5.8%)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137개 중 40개(29.2%)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97개(70.8%)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중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74개(54.0%)로 조사되었다.

5) 국토교통위원회

<표 2-5> 국토교통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국토교통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422				
	유	54개(12.8%)			
	무	368개(87.2%)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상정	없음
	54개 (12.8%)	294개 (69.7%)	36개 (8.5%)	1개(0.2%)	37개 (8.8%)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422개 중 54개(12.8%)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368개(87.2%)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294개(69.7%)로 조사되었다.

6) 국회운영위원회

<표 2-6> 국회운영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국회운영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46			
	유	5개(10.9%)		
	무	41개(89.1%)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없 음
	5개(10.9%)	29개(63.0%)	2개(4.3%)	10개(21.7%)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46개 중 5개(10.9%)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41개(89.1%)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29개(63.0%)로 조사되었다.

7) 기획재정위원회

<표 2-7> 기획재정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기획재정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690	
	유	216개(31.3%)
	무	474개(68.7%)

기획재정위원회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세수 추계서	없 음
		216개 (31.3%)	350개 (50.7%)	22개 (3.1%)	2개(0.2%)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690개 중 216개(31.3%)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474개(68.7%)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 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350개(50.7%)로 조사되었다.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표 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366				
	유	50개(13.7%)			
	무	316개(86.3%)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없 음	
	50개(13.7%)	238개(65.0%)	46개(12.6%)	10개(8.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366개 중 50개(13.7%)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316개(86.3%)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 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238개(65.0%)로 조사되었다.

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표 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9
	유
	무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없음
	9개(1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9개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과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 법안은 없었다.

1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표 2-1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152				
	유				
	무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상정	없음
	22개 (14.5%)	102개 (67.1%)	16개 (10.5%)	3개(2.0%)	9개(5.9%)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212개 중 53개(25.0%)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159개(75.0%)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 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140개(66.0%)로 조사되었다.

13) 보건복지위원회

<표 2-13> 보건복지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보건복지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703				
	유	193개(27.5%)			
	무	510개(72.5%)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상 정	없 음
	193개 (27.5%)	390개 (55.5%)	52개 (7.4%)	1개(0.1%)	67개 (9.5%)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703개 중 193개(27.5%)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510개(72.5%)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 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390개(55.5%)로 조사되었다.

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표 2-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226
	유 34개(15.0%)
	무 192개(85.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상 정	없 음
	34개 (15.0%)	143개 (63.3%)	19개 (8.4%)	1개(0.4%)	29개 (12.8%)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226개 중 34개(15.0%)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192개(85.0%)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 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143개(63.3%)로 조사되었다.

15) 안전행정위원회

<표 2-15> 안전행정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안전행정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713				
	유	158개(22.2%)			
	무	555개(77.8%)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상 정	없 음
	158개 (22.2%)	429개 (60.2%)	74개 (10.4%)	1개(0.1%)	51개 (7.2%)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713개 중 158개(22.2%)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555개(77.8%)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 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429개(60.2%)로 조사되었다.

16) 여성가족위원회

<표 2-16> 여성가족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여성가족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124			
	유	26개(21.0%)		
	무	98개(79.0%)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없음
	26개(21.0%)	75개(60.5%)	6개(4.8%)	17개(13.7%)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124개 중 26개(21.0%)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98개(79.0%)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6개(4.8%)로 조사되었다.

17) 외교통일위원회

<표 2-17> 외교통일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외교통일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103			
	유	21개(20.4%)		
	무	82개(79.6%)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없음
	21개(20.3%)	72개(69.9%)	5개(4.9%)	5개(4.9%)

제2장 분석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103개 중 21개(20.4%)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82개(79.6%)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72개(69.9%)로 조사되었다.

18) 정무위원회

<표 2-18> 정무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정무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222			
	유	73개(32.9%)		
	무	149개(67.1%)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없음
	73개(32.9%)	118개(53.2%)	18개(8.1%)	13개(5.9%)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222개 중 73개(32.9%)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149개(67.1%)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118개(53.2%)로 조사되었다.

19) 정보위원회

<표 2-19> 정보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정보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11
	유
	무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미첨부사유서
	11개(100.0%)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정보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11개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없었고,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11개(100.0%)로 조사되었다.

2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표 2-2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n=12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유	0개(0.0%)	
	무	12개(100.0%)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없음
	5개(41.7%)	6개(50.0%)	1개(8.3%)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12개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없었고,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5개(41.7%)로 조사되었다.

21) 지식경제위원회

<표 2-21> 지식경제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지식경제위원회		
	n=2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유	0개(0.0%)
	무	2개(100.0%)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미첨부사유서	없음
	1개(50.0%)	1개(50.0%)

제2장 분석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2개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없었고,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1개(50.0%)로 조사되었다.

22) 환경노동특별위원회

<표 2-22> 환경노동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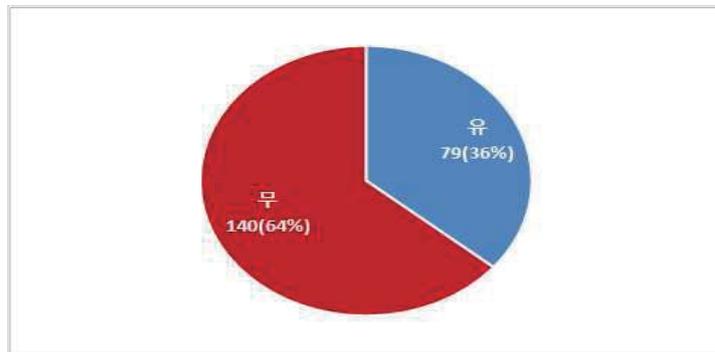
환경노동위원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n=324				
	유	77개(23.8%)			
	무	247개(76.2%)			
비용추계서 세부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요구서 제출	상정	없음
	77개 (23.8%)	199개 (61.4%)	19개 (5.9%)	5개(1.5%)	24개 (7.4%)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324개 중 77개(23.8%)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247개(76.2%)의 법안은 미첨부 하였다. 이 중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한 법안은 199개(61.4%)로 조사되었다.

6. 법안유형별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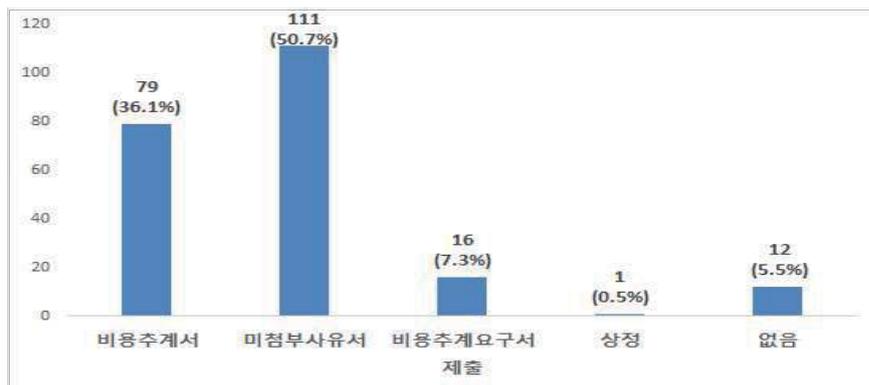
1) 보상법안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21> 보상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219)



보상법안 219개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79개(36%)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140개(64%)로 나타났다.

<그림 2-22> 비용추계서 유/무(세부 유형별, n=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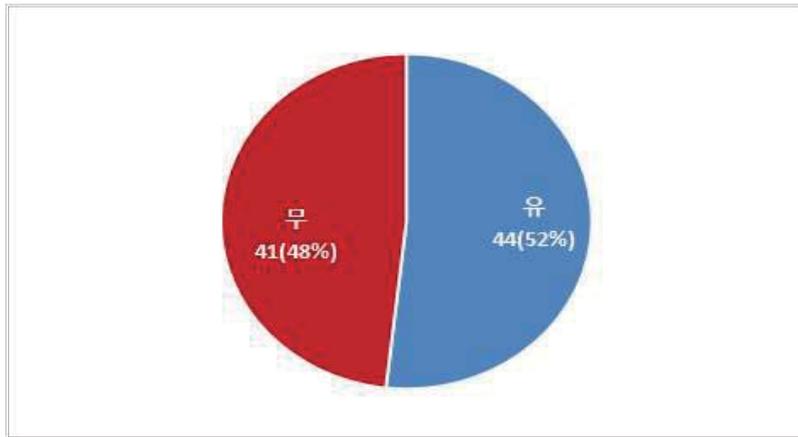


보상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111개(50.7%),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79개(36.1%),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16개(7.3%) 순으로 나타났다.

제2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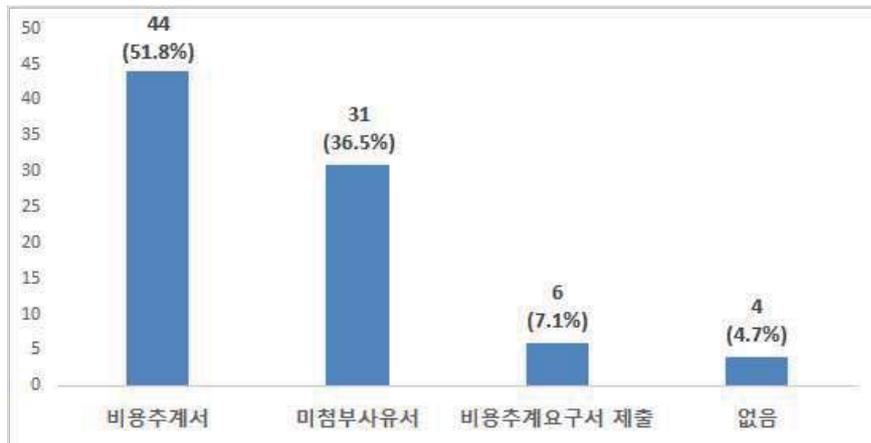
1-1) 공로보상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23> 공로보상 법안의 비용추계서 유/무(n=85)



공로보상 법안 85개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44개(52%)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41개(4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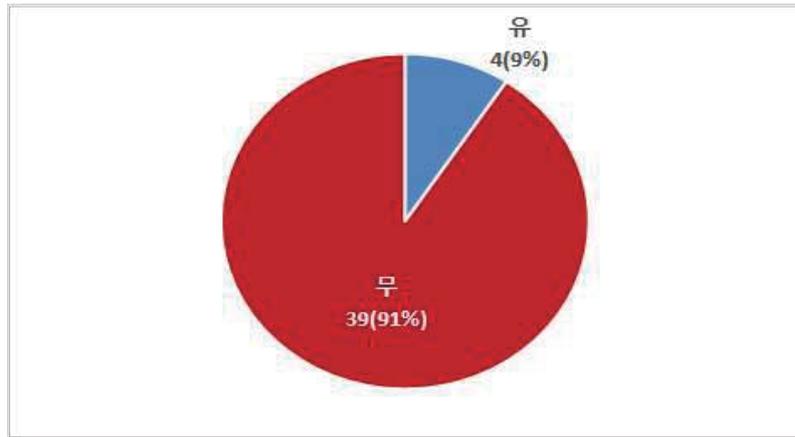
<그림 2-24> 공로보상 법안의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85)



공로보상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44개(51.8%), 미첨부사유서 31개(36.5%),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6개(7.1%), 없음 4개(4.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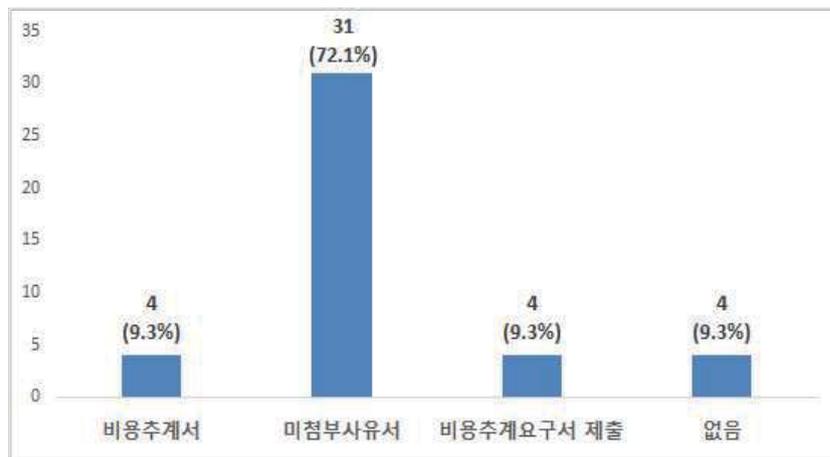
1-2) 손실보상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25> 손실보상 법안의 비용추계서 유/무(n=43)



손실보상 43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4개(9%)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39개(91%)로 나타났다.

<그림 2-26> 손실보상 법안의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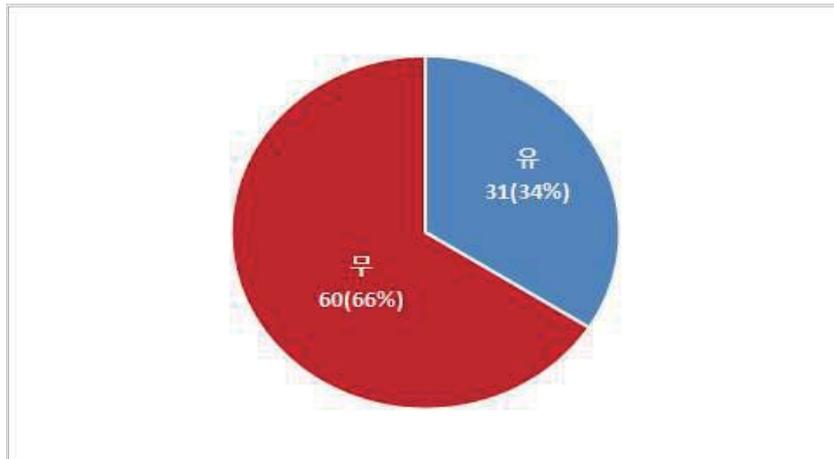


손실보상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31개(72.1%),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4개(9.3%),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4개(9.3%), 없음 4개(9.3%)로 나타났다.

제 2 장 분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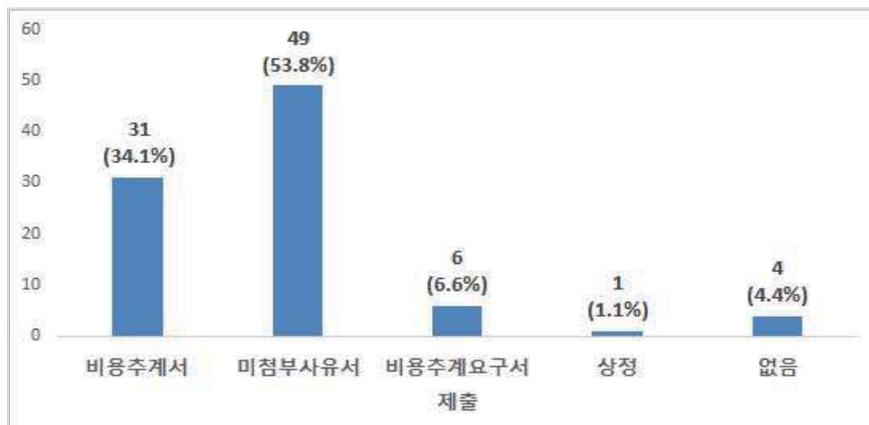
1-3) 위로보상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27> 위로보상 법안의 비용추계서 유/무(n=91)



위로보상 91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31개(34%)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60개(6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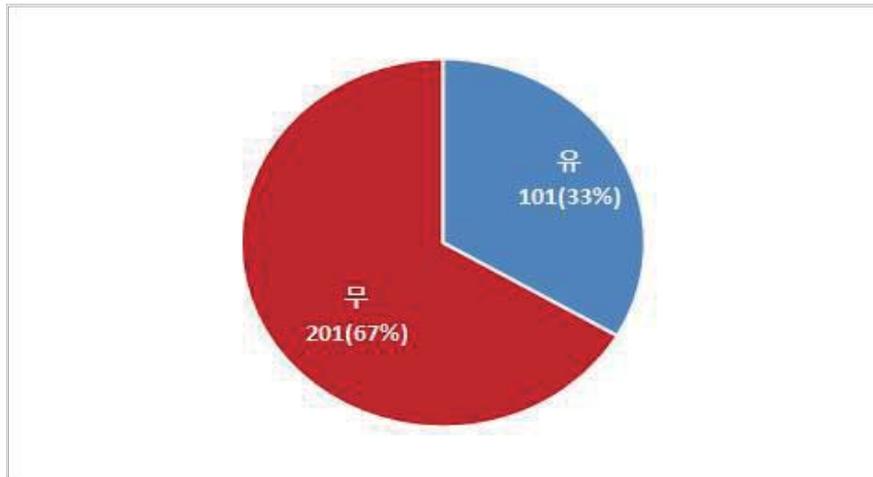
<그림 2-28> 위로보상 법안의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91)



위로보상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49개(53.8%),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31개(34.1%),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6개(6.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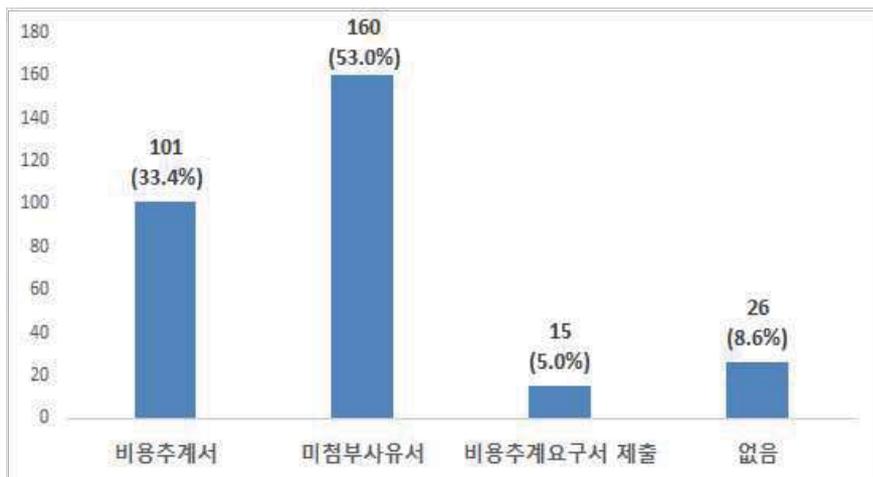
2) 보장법안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29> 보장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302)



보장법안 302개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101개(33%)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201개(67%)로 나타났다.

<그림 2-30> 비용추계서 유/무(세부 유형별, n=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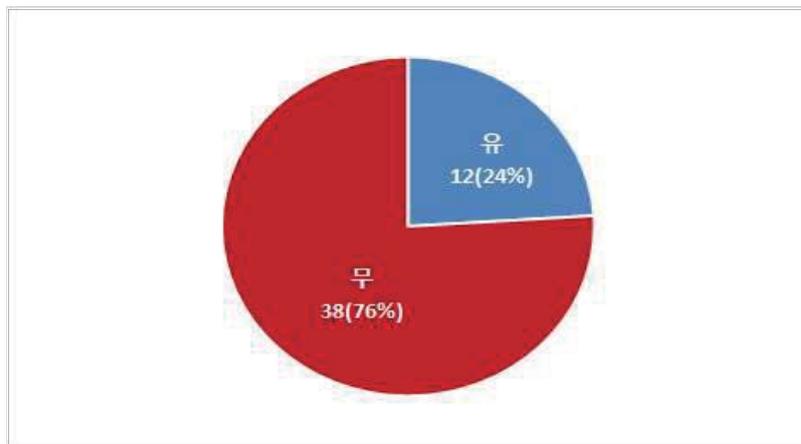


제2장 분석

보장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160개(53.0%),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101개(33.4%), 없음 26개(8.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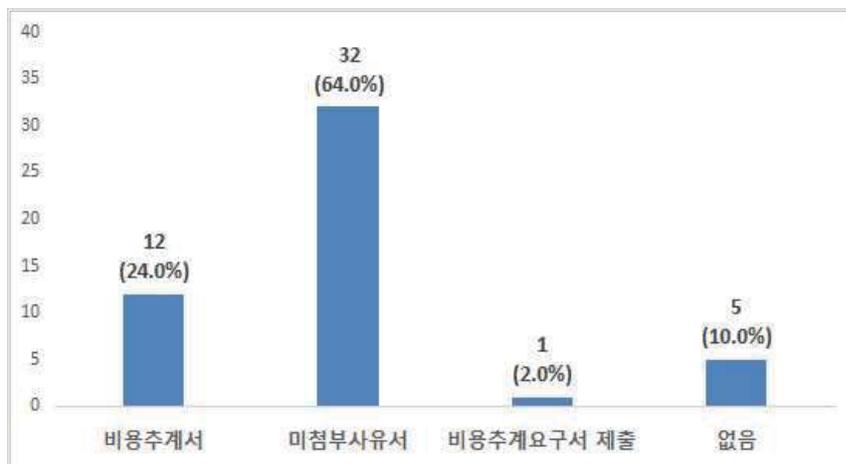
2-1) 공적부조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31> 공적부조 비용추계서 유/무(n=50)



공적부조 50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12개(24%)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38개(76%)로 나타났다.

<그림 2-32> 비용추계서 유/무(세부 유형별, n=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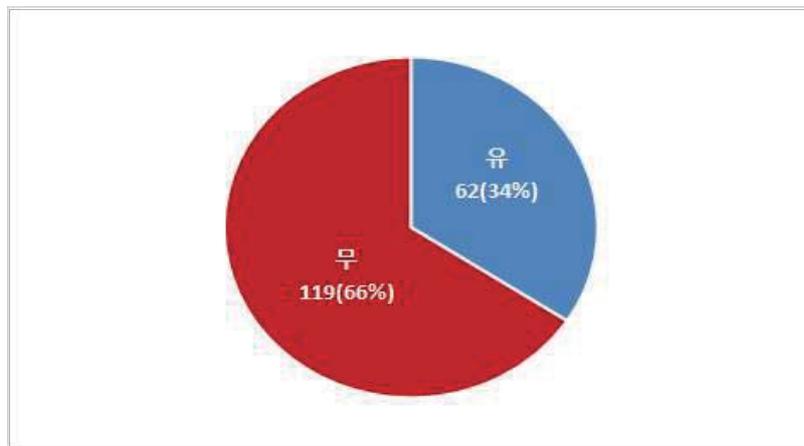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공적부조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32개(64.0%),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12개(24.0%), 없음 5개(10.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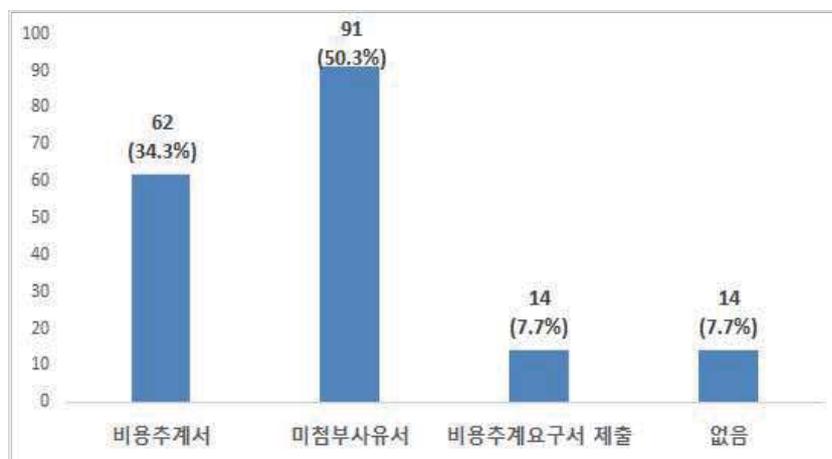
2-2) 사회보험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33> 사회보험 비용추계서 유/무(n=181)



사회보험 181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62개(34%)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119개(66%)로 나타났다.

<그림 2-34> 비용추계서 유/무(세부 유형별, n=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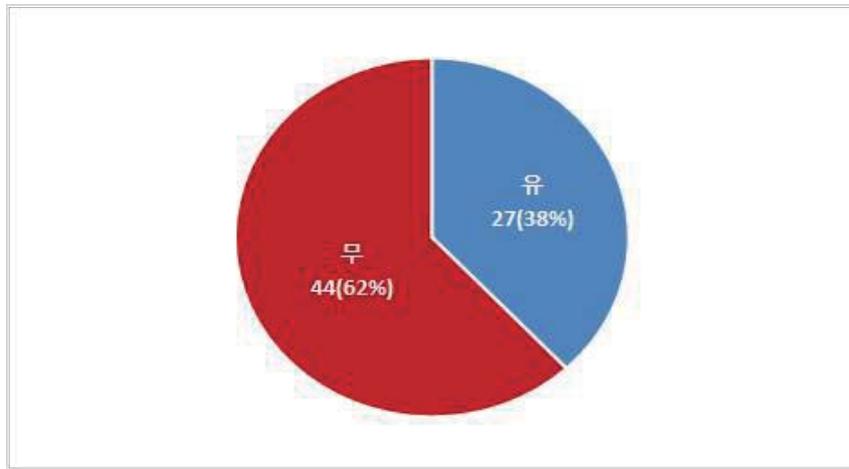


제2장 분석

사회보험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91개(50.3%),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62개(34.3%), 비용추계요구서 제출·없음 각 14개(7.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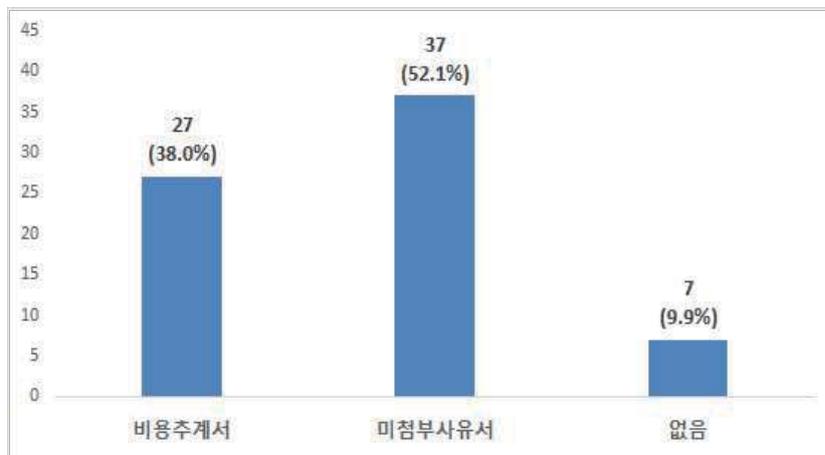
2-3)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35>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추계서 유/무(n=71)



사회복지서비스 71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27개(38%)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44개(62%)로 나타났다.

<그림 2-36> 비용추계서 유/무(세부 유형별, n=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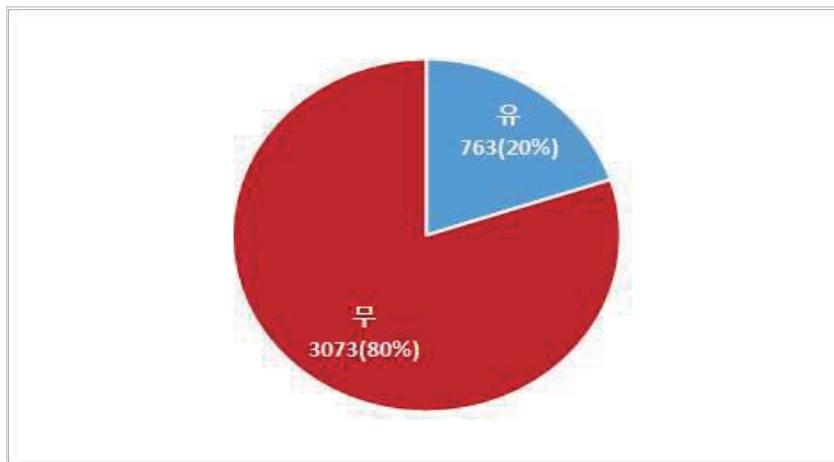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사회복지서비스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37개(52.1%),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27개(38.0%), 없음 7개(9.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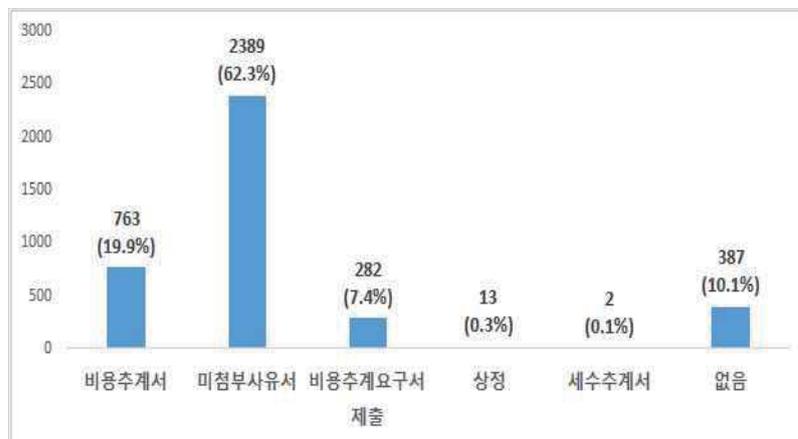
3) 사업법안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37> 사업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3836)



사업법안 3836개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763개(20%)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3073개(80%)로 나타났다.

<그림 2-38> 사업법안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3836)



제2장 분석

사업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2389개(62.3%),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763개(19.9%), 없음 387개(10.1%) 순으로 나타났다.

3-1) 사업부문 비용추계서 여부

<표 2-23> 사업법안 사업부문(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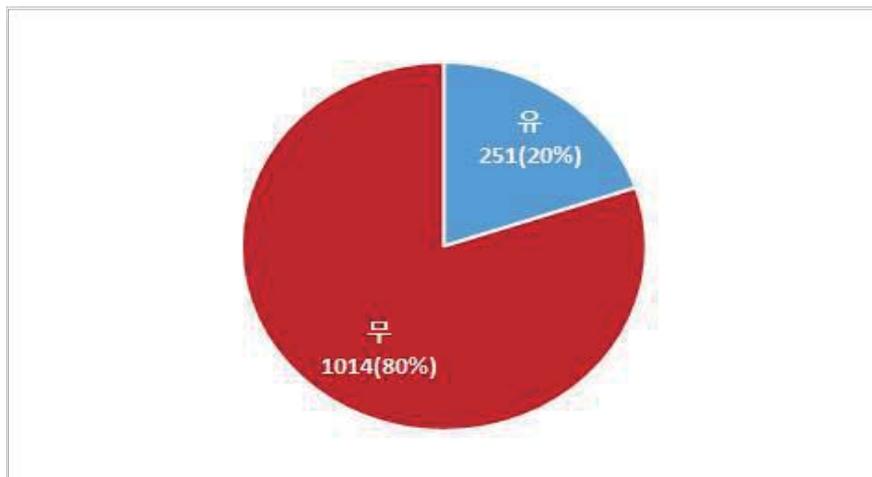
비용추계서 유/무	유	1개 법안
	무	1개 법안(미첨부사유서)

※ 사업법안 사업부문은 법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표로 대체

사업 2개 법안 모두 미통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개 법안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한 개의 법안은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3-2) 사회부문 비용추계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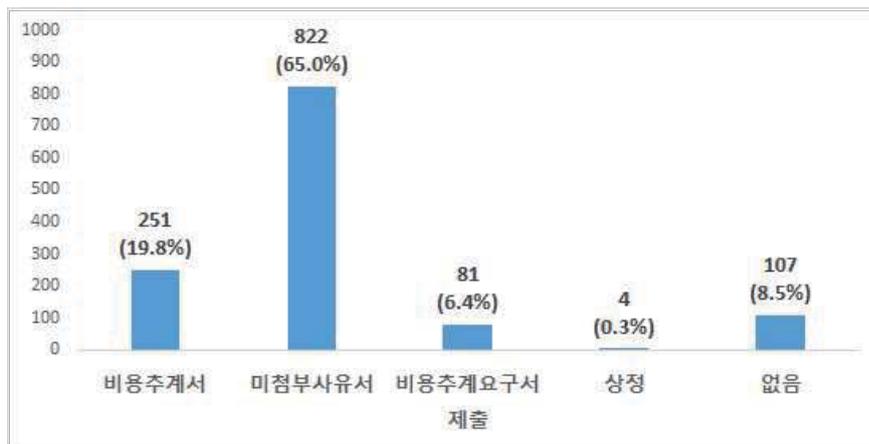
<그림 2-39> 사회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1265)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사회분야법안의 1265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251개 (20%)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1014개(8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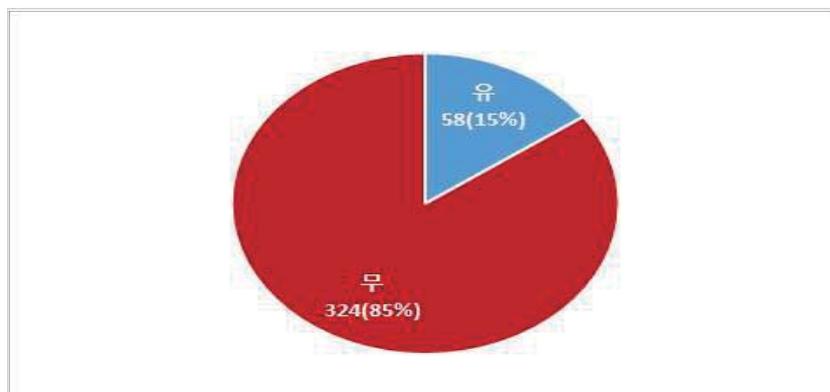
<그림 2-40> 사회법안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1265)



사회분야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822개(65.0%),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251개(19.8%), 없음 107개(8.5%) 순으로 나타났다.

3-3) 산업부문 비용추계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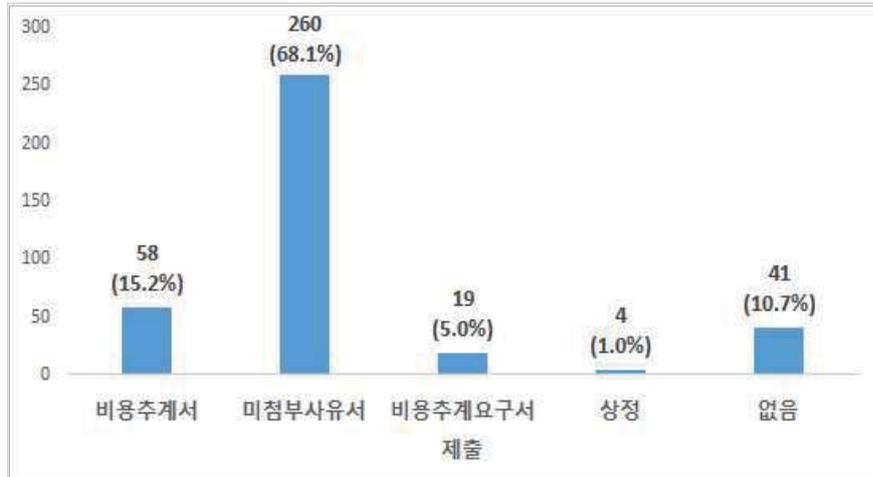
<그림 2-41> 산업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382)



제 2 장 분 석

산업부문 382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58개(15%)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324개(8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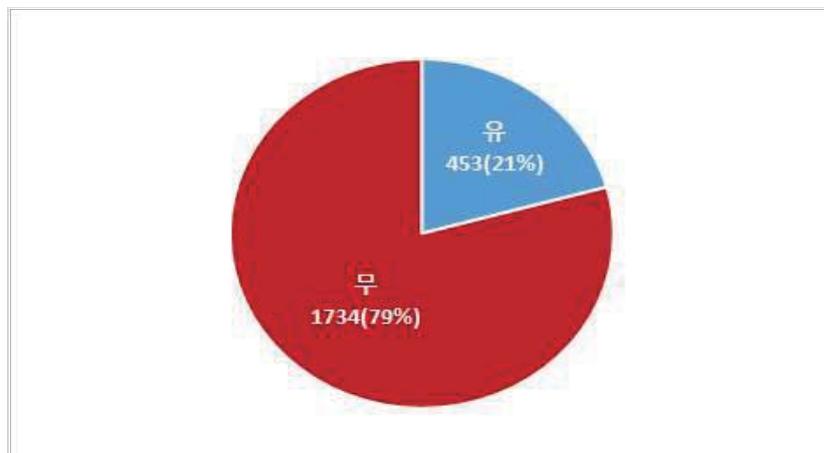
<그림 2-42> 산업법안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382)



산업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260개(68.1%),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58개(15.2%), 없음 41개(10.7%) 순으로 나타났다.

3-4) 행정부문 비용추계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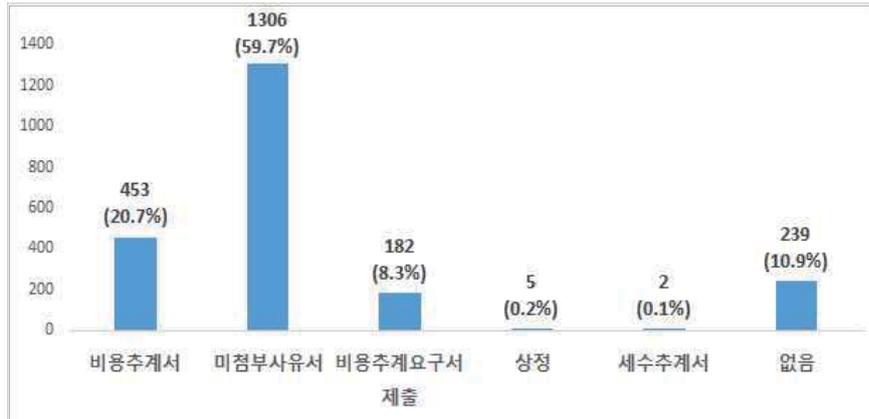
<그림 2-43> 행정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2187)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행정부문 2187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453개(21%)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1734개(7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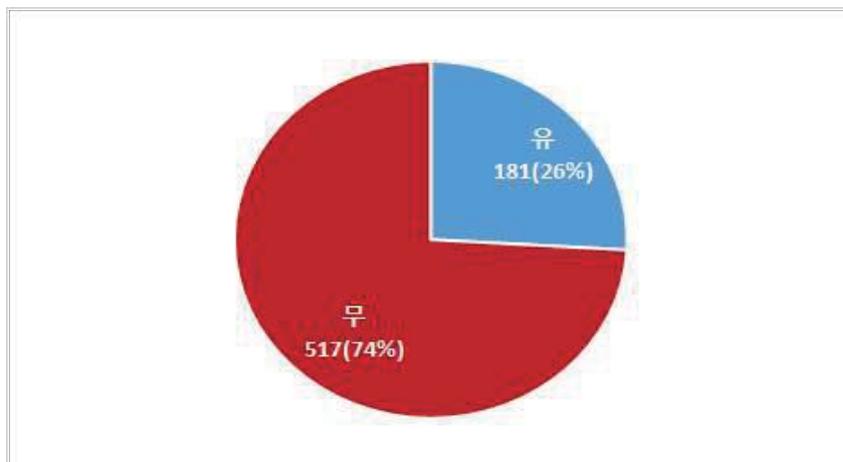
<그림 2-44> 행정법안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2187)



행정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1306개(59.7%),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453개(20.7%), 없음 239개(10.9%) 순으로 나타났다.

4) 조직부문 비용추계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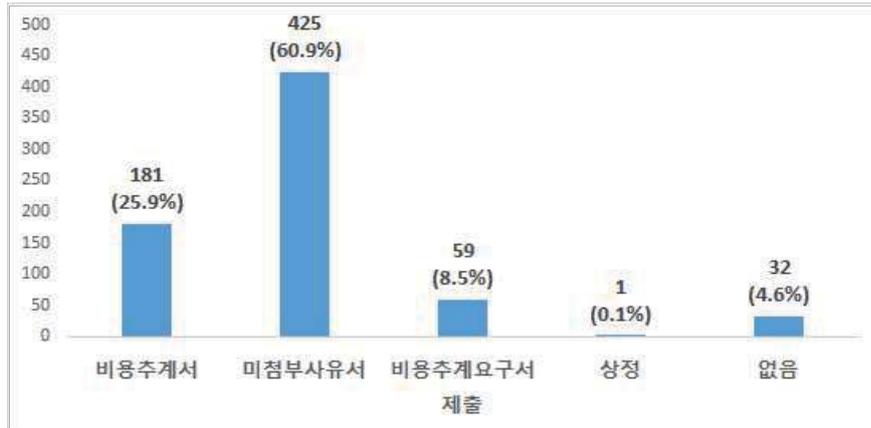
<그림 2-45> 조직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698)



제 2 장 분 석

조직법안 698개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181개(26%)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517개(7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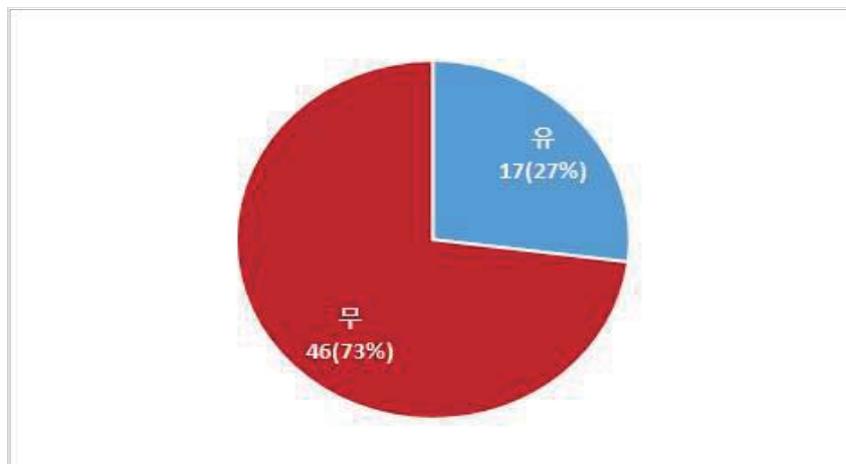
<그림 2-46> 조직법안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698)



조직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425개(60.9%),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181개(25.9%),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59개(8.5%) 순으로 나타났다.

4-1)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 비용추계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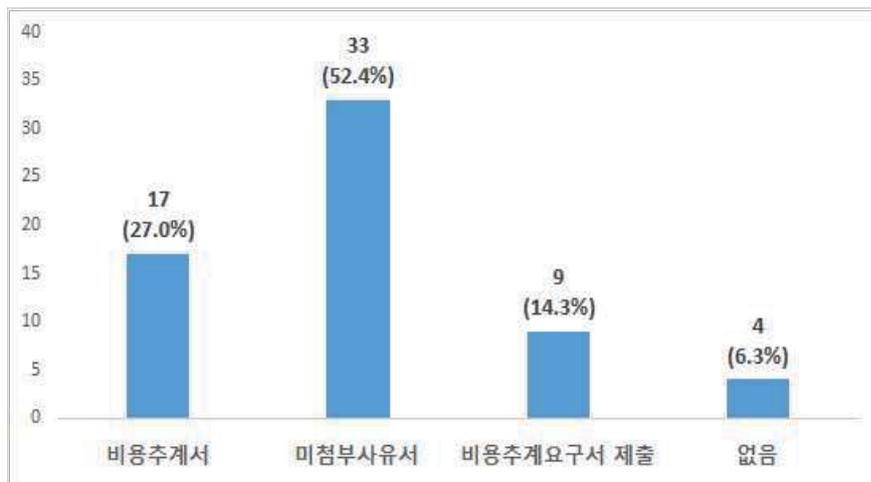
<그림 2-47>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63)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법인설립 및 지원의 63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17개(27%)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46개(73%)로 나타났다.

<그림 2-48>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유형별, n=63)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33개(52.4%),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17개(27.0%),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9개(14.3%) 순으로 나타났다.

4-2) 사회 부문 비용추계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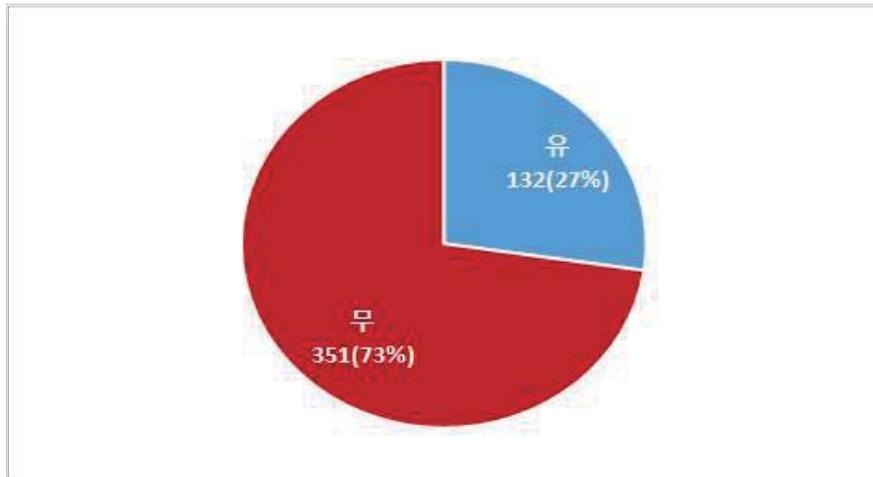
<표 2-24> 조직법안 사회부문(n=1)

비용추계서 유/무	미첨부사유서

※ 조직법안 사회부문은 법안이 한 개이기 때문에 표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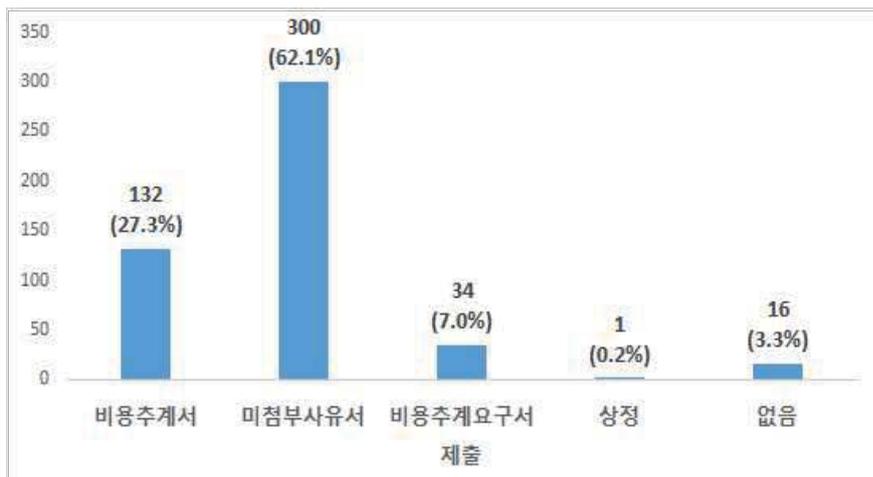
4-3) 조직설립 법안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49> 조직설립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483)



조직설립의 483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132개(27%)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351개(73%)로 나타났다.

<그림 2-50> 조직설립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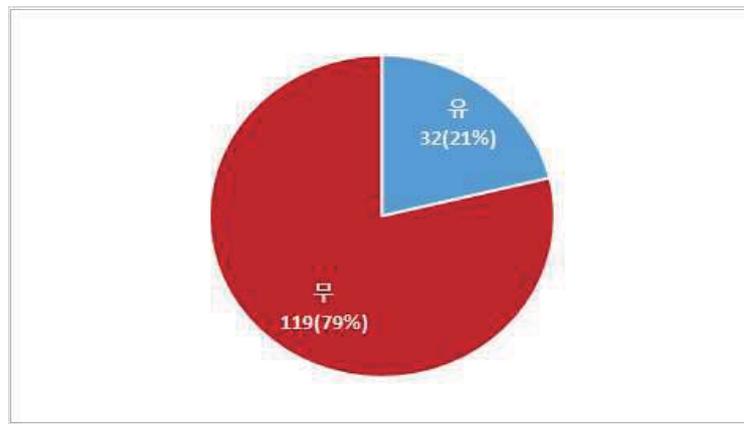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조직설립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300개(62.1%),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132개(27.3%),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34개(7.0%) 순으로 나타났다.

4.4) 조직운영 법안 비용추계서 여부

<그림 2-51> 조직운영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151)



조직운영 151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은 32개(21%)였으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119개(79%)로 나타났다.

<그림 2-52> 조직운영 법안 비용추계서 유/무(n=151)



조직운영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안 91개(60.3%), 비용추계서 제출 법안 32개(21.2%),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16개(10.6%) 순으로 나타났다.

7. 소 결

1) 제안자별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율

의원발의 형식으로 제출된 4665건의 법안 중 1052건(23%)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정부발의의 경우에는 310건 중 72건(23%)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다. 전체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율이 22%라는 점에 비추어 의원발의와 정부발의 법안에서 큰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다. 위원장(위원회) 발의 80건의 법안은 모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지 않다.

2) 가결 또는 미통과 법안별 비용추계서 첨부율

가결된 법안 430건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16%인 반면, 미통과 법안 4623건의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23%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비용추계서의 첨부여부는 법안의 가결율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된다.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재정수반법안의 가장 많은 수가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용추계서 첨부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로서 비용추계서 첨부여부와 가결율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상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관위원회별 발의된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율

300건 이상의 재정수반법안이 제출된 소관위원회 중 비용추계서 첨부율이 가장 높은 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690건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216건(31.3%)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다. 다

II.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비용 추계제도 이행 수준

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27.5%, 환경노동위원회 23.8% 순으로 전체법안에 대한 첨부율 22%를 상회하였다. 안전행정위원회는 713건의 법안 중 158건의 법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22.2%로 평균에 상응하는 첨부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573건의 제출된 법안 중 98건의 법안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17.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366건의 법안 중 50건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13.7%, 국토교통위원회는 12.8%의 첨부율을 보여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소관위원회	제출법안	첨부법안	첨부율(%)
미정	2	2	100.0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3	1	33.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	1	33.3
정무위원회	222	73	32.9
기획재정위원회	690	216	31.3
국방위원회	137	40	29.2
보건복지위원회	703	193	27.5
법제사법위원회	212	53	25.0
환경노동위원회	324	77	23.8
여성가족위원회	124	26	21.0
외교통일위원회	103	21	2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73	98	17.1
안전행정위원회	713	158	22.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26	34	15.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52	22	14.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66	50	13.7
국토교통위원회	422	54	12.8
국회운영위원회	46	5	10.9

제2장 분석

소관위원회	제출법안	첨부법안	첨부율(%)
정보위원회	11	0	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2	0	0.0
지식경제위원회	2	0	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9	0	0.0

4) 법안 유형별 비용추계서 첨부율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재정수반법률을 대분류로 보상법안, 보장법안, 사업법안 및 조직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4개의 법안유형 중 비용추계서 첨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보상법안으로 36%의 첨부율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첨부율을 나타내는 유형은 사업법안으로 20%의 첨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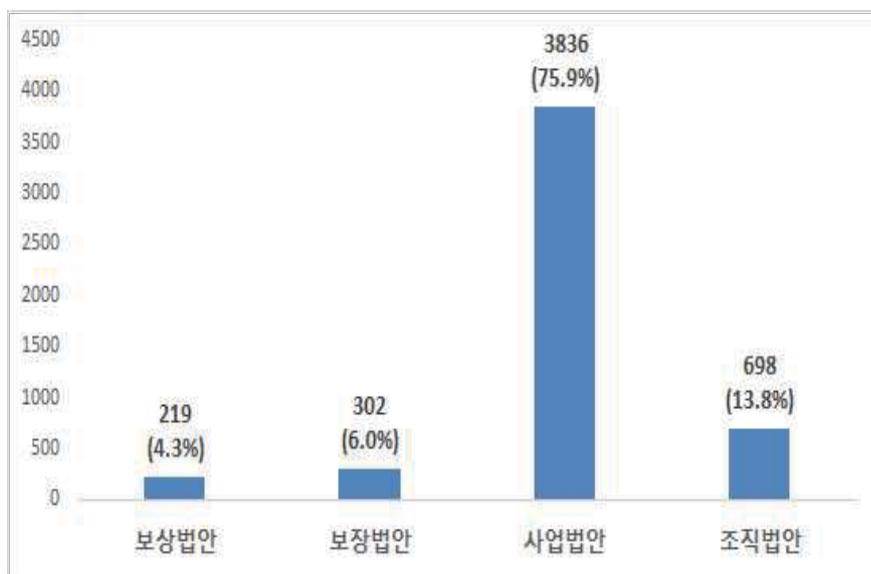
세부분류 중 보상법안 중 공로보상의 경우 52%로 가장 높은 첨부율을 보였고, 사업법안 중 산업부문 유형은 15%로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법안유형별 첨부율 현황은 아래 표 참조).

분류	전체 법안	계	보상법안			계	보장법안			계	사업법안				계	조직법안			
			공로보상	손실보상	위로보상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사업	사회	산업	행정		법인설립	사회	조직설립	조직운영
제출법안	5055	219	85	43	91	302	50	181	71	3836	1	1265	382	2187	698	63	1	483	151
첨부법안	1124	79	44	4	31	101	12	62	27	763	0	251	58	453	181	17	0	132	32
첨부율(%)	22	36	52	9	34	33	24	34	38	20	0	20	15	21	26	27	0	27	21

Ⅲ.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법안유형별 동향

1. 제19대 국회 제출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

<그림 2-53> 전체법안유형(n=5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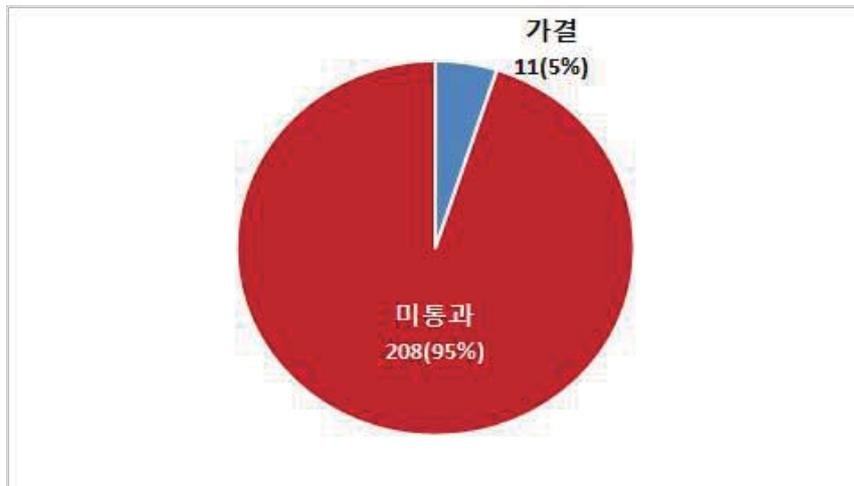
전체 5055개 법안을 내용에 따른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법안이 3836건(7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법안 698건(13.8%), 보장법안 302건(6.0%), 보상법안 219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제19대 국회 발의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을 그 내용에 따라 보상법안, 보장법안, 사업법안, 조직법안으로 세분화 하여 살펴본다.

2. 보상법안 입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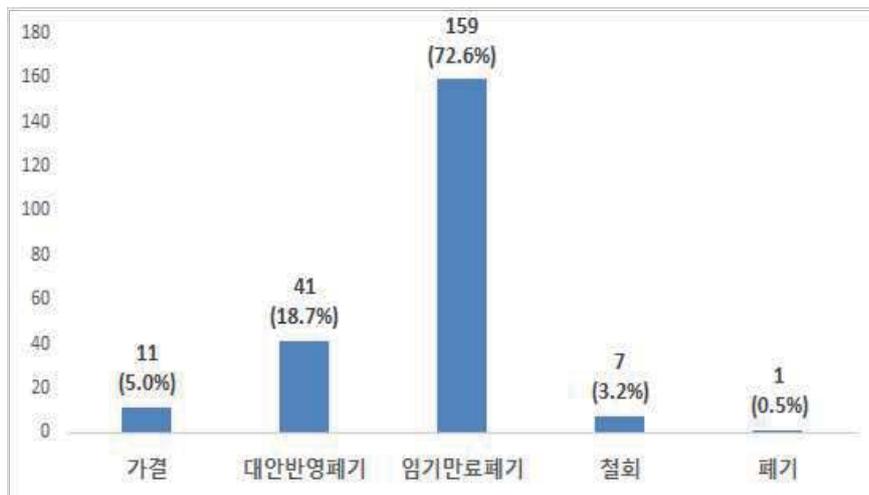
1) 보상법안 가결여부

<그림 2-54> 보상법안 가결여부(n=219)



보상법안 219개 중 가결된 법안은 11개(5%), 미통과된 법안은 208개(9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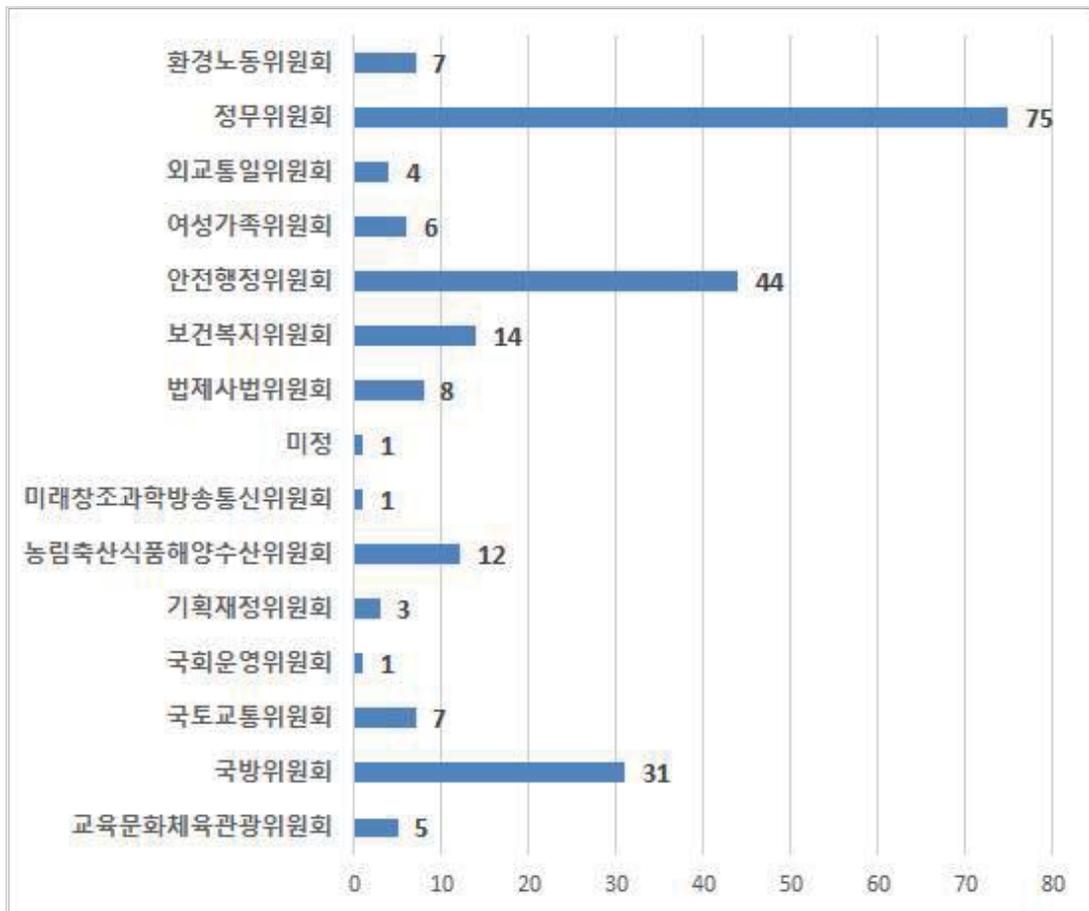
<그림 2-55> 보상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219)



제출된 보상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은 임기만료폐기 159개(72.6%), 대안반영폐기 41개(18.7%), 가결 11개(5.0%) 순으로 나타났다.

2) 보상법안 소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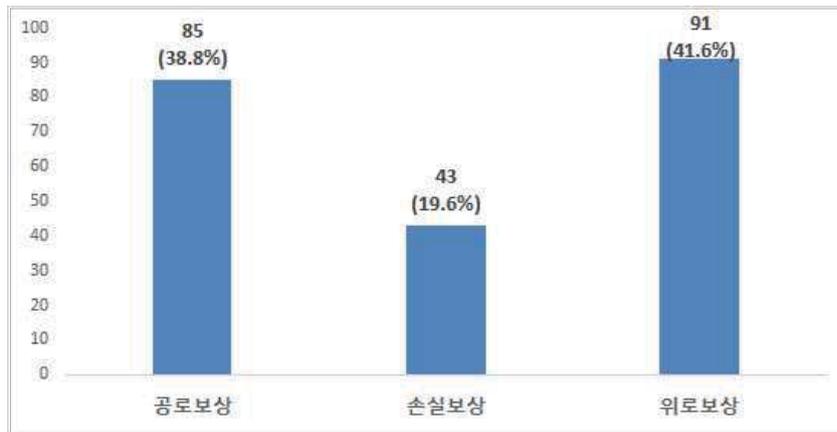
<그림 2-56> 보상법안 소관위원회(n=219)



219개의 보상법안의 해당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정무위원회 75개, 안전행정위원회 44개, 국방위원회 31개, 보건복지위원회 14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개 순으로 나타났다.

3) 보상법안 세부유형

<그림 2-57> 보상법안 세부유형(n=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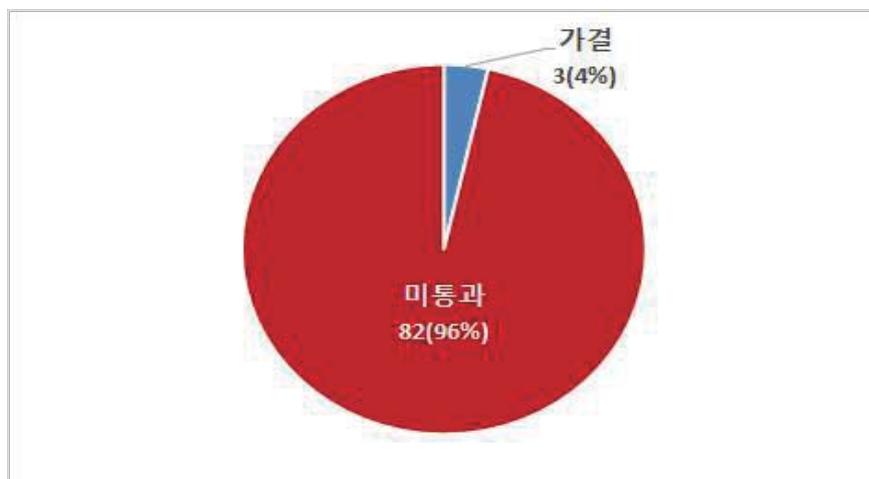


219개의 보상법안을 세부 유형으로 구별하면 위로보상 91개(41.6%), 공로보상 85개(38.8%), 손실보상 43개(19.6%)로 나타났다.

2-1. 공로보상[n=8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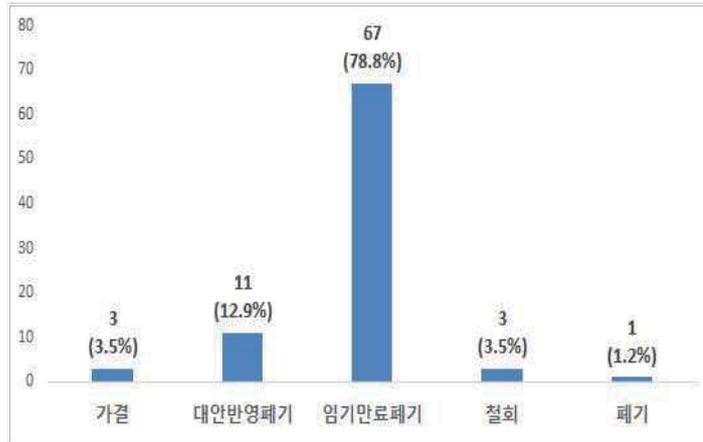
1) 공로보상 법안 가결여부

<그림 2-58> 공로보상 법안 가결여부(n=85)



공로보상 85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3개(4%)였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82개(9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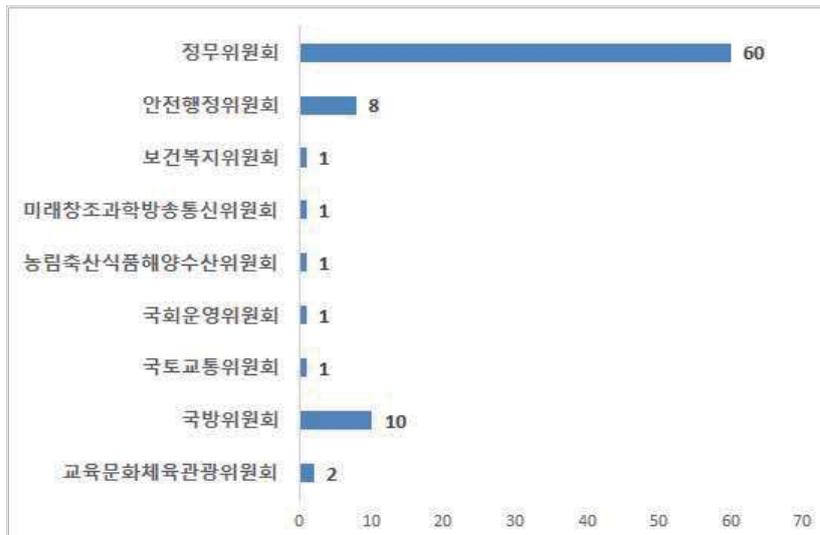
<그림 2-59> 공로보상 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85)



공로보상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은 임기만료폐기 67개(78.8%), 대안반영폐기 11개(12.9%), 가결 3개(3.5%), 철회 3개(3.5%) 순으로 나타났다.

2) 공로보상 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60> 공로보상 법안 소관위원회(n=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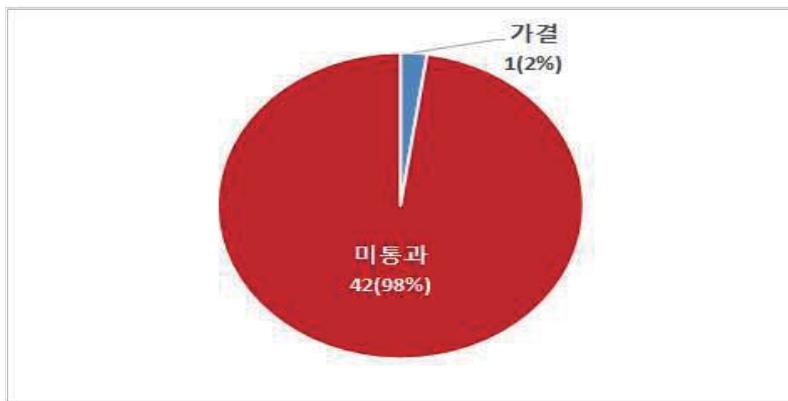
제 2 장 분 석

공로보상 85개 법안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정무위원회 60개, 국방위원회 10개, 안전행정위원회 8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개 순으로 나타났다.

2-2. 손실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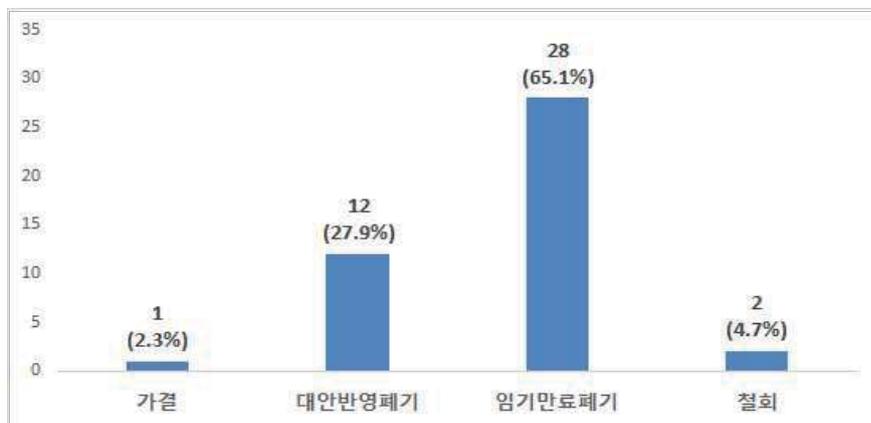
1) 손실보상 법안 가결여부

<그림 2-61> 손실보상 법안의 가결여부(n=43)



손실보상 43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1개(2%)였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42개(98%)로 나타났다.

<그림 2-62> 손실보상 법안의 가결여부(유형별, n=43)



손실보상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28개(65.1%), 대안반영폐기 12개(27.9%), 철회 2개(4.7%), 가결 1개(2.3%) 순으로 나타났다.

2) 손실보상 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63> 손실보상 법안 소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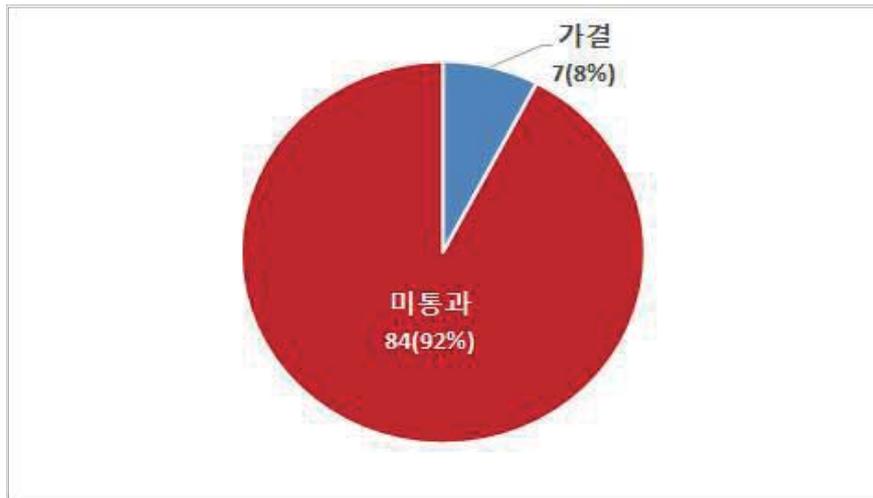


손실보상 43개 법안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8개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위원회 6개, 기획재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각 3개 순으로 나타났다.

2-3. 위로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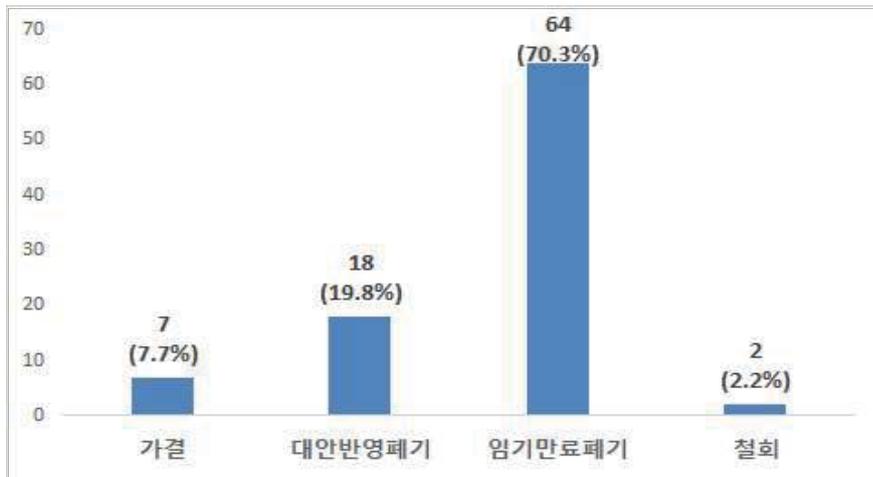
1) 위로보상 법안 가결여부

<그림 2-64> 위로보상 법안의 가결여부(n=91)



위로보상 91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7개(8%)였으며, 미통과 된 법안은 84개(9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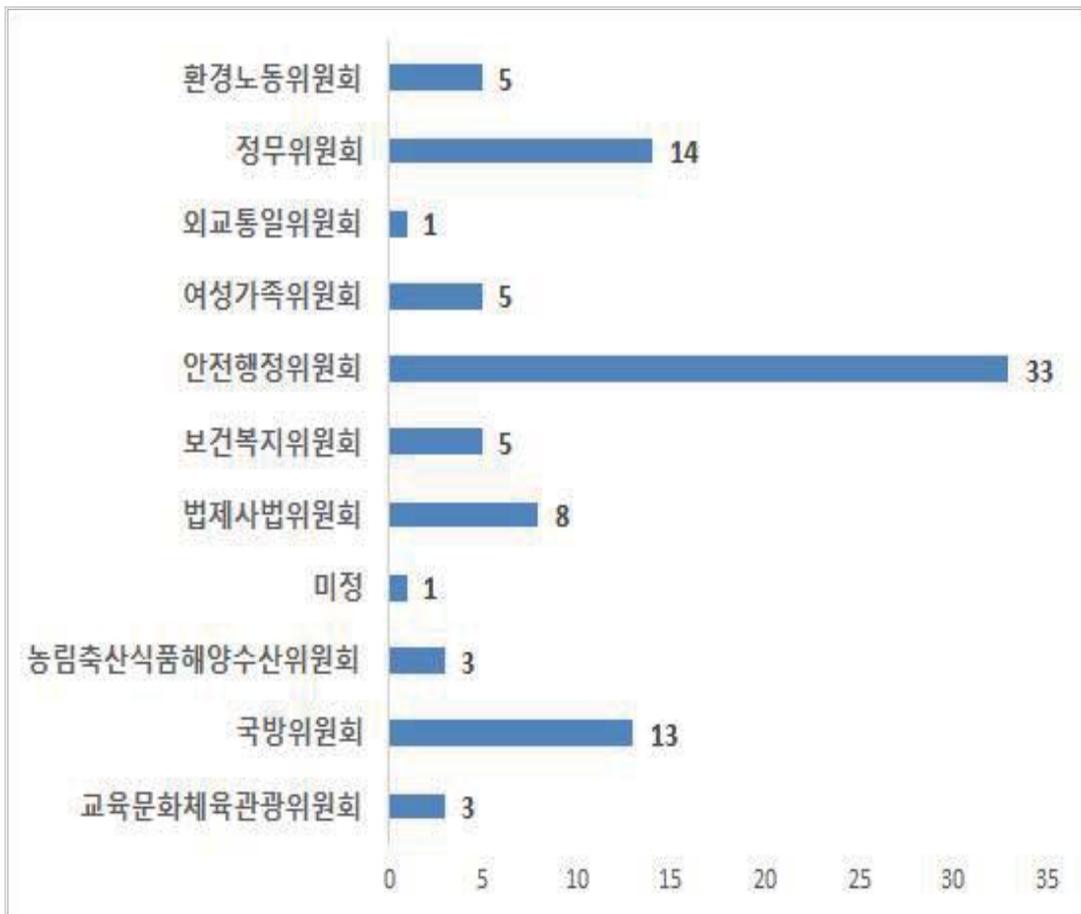
<그림 2-65> 위로보상 법안의 가결여부(유형별, n=91)



위로보상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64개(70.3%), 대안반영폐기 18개(19.8%), 가결 7개(7.7%), 철회 2개(2.2%) 순으로 나타났다.

2) 위로보상 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66> 위로보상 법안 소관위원회(n=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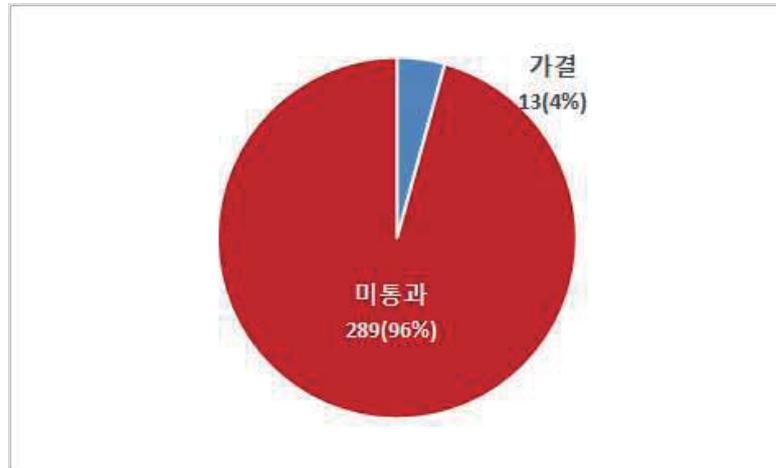


위로보상 85개 법안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안전행정위원회가 33개로 가장 많았으며, 정무위원회 14개, 국방위원회 13개 법제사법위원회 8개 순으로 나타났다.

3. 보장법안 입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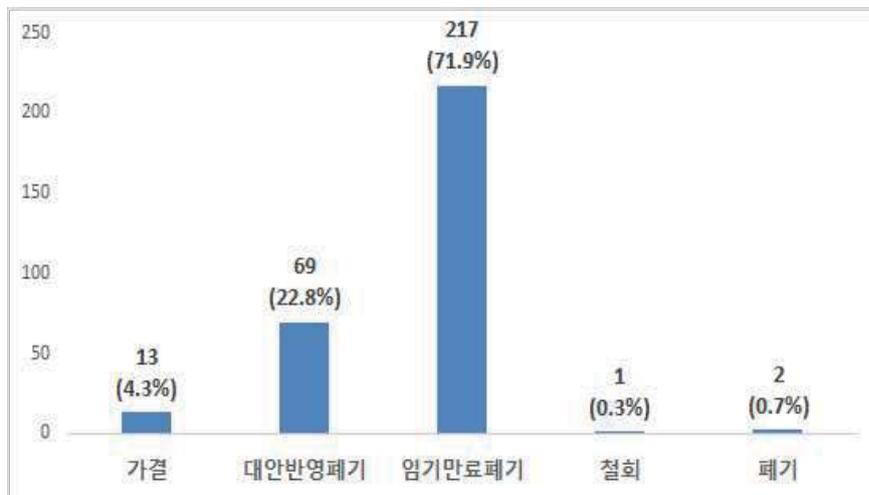
1) 보장법안 가결여부

<그림 2-67> 보장법안 가결여부(n=302)



보장법안 302개 중 가결된 법안은 13개(4%) 이었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289개(9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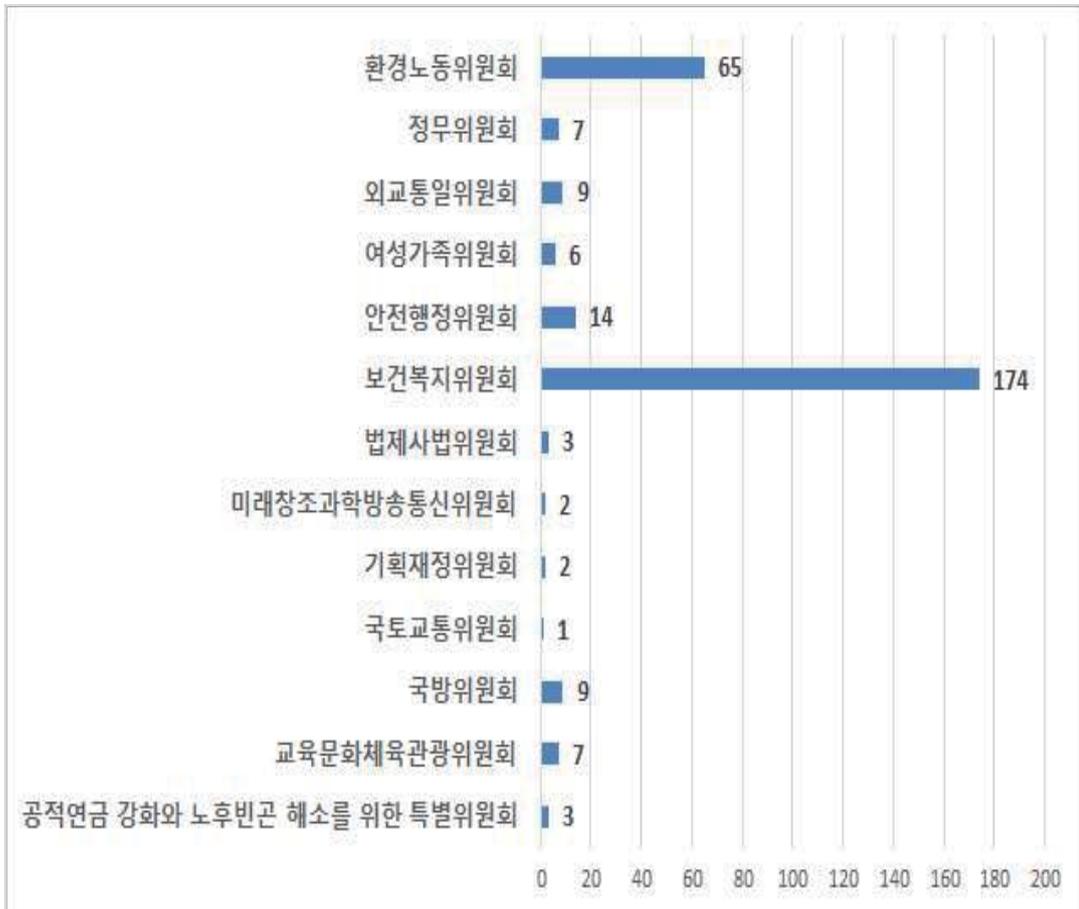
<그림 2-68> 보장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302)



보장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217개 (71.9%), 대안반영폐기 69개(22.8%), 가결 13개(4.3%) 순으로 나타났다.

2) 보장법안 소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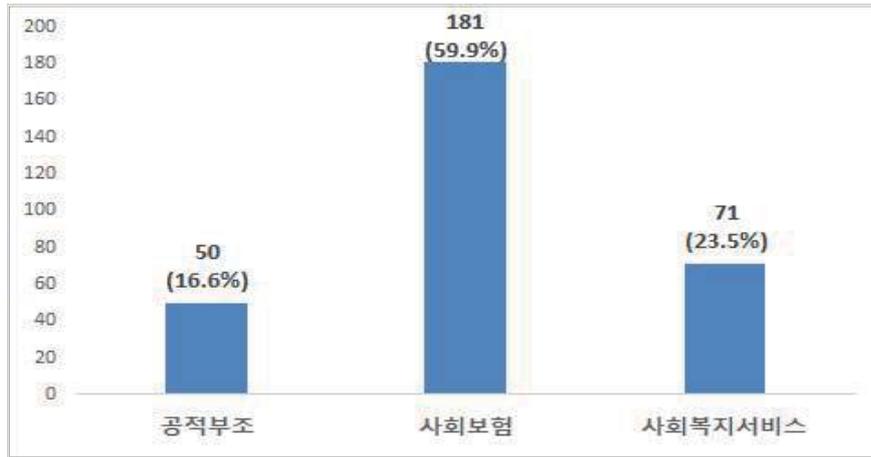
<그림 2-69> 보장법안 소관위원회



보장법안 302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 174개, 환경노동위원회 65개, 안전행정위원회 14개,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9개 순으로 나타났다.

3) 보장법안 세부유형

<그림 2-70> 보장법안 세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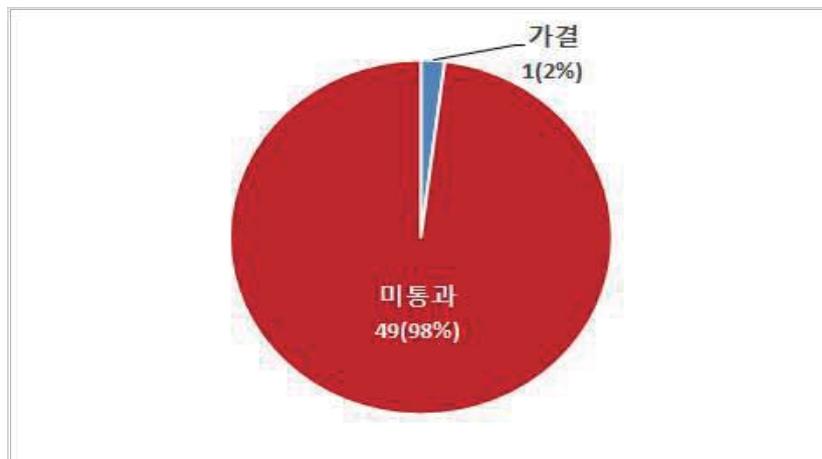


보장법안 302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 181개(59.9%), 사회복지서비스 71개(23.5%), 공적부조 50개(16.6%)로 나타났다.

3-1. 공적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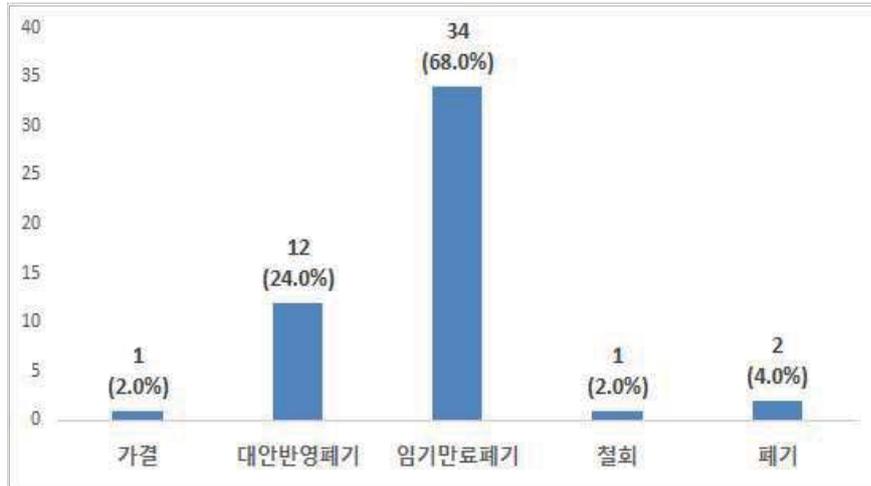
1) 공적부조 법안 가결여부

<그림 2-71> 공적부조 가결여부(n=50)



공적부조 50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1개(2%) 였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49개(9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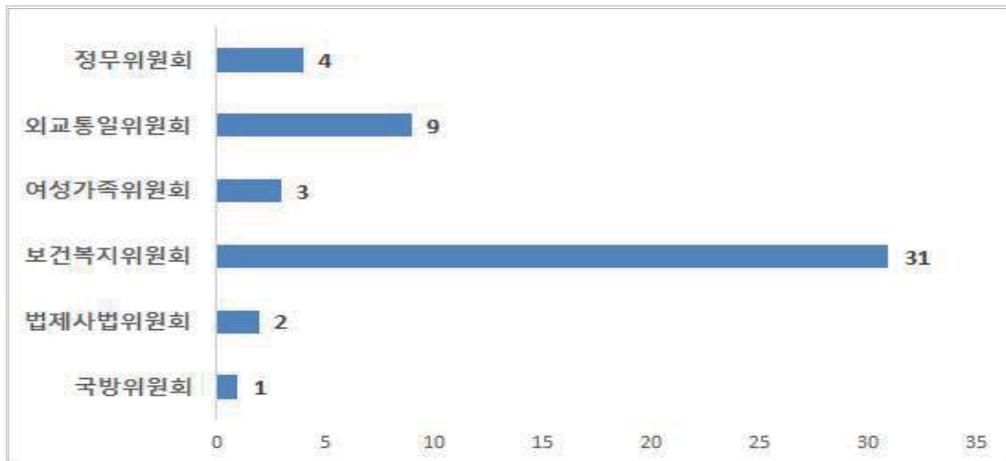
<그림 2-72> 공적부조 가결여부(유형별, n=50)



공적부조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34개(68.0%), 대안반영폐기 12개(24.0%), 폐기 2개(4.0%) 순으로 나타났다.

2) 공적부조 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73> 공적부조 소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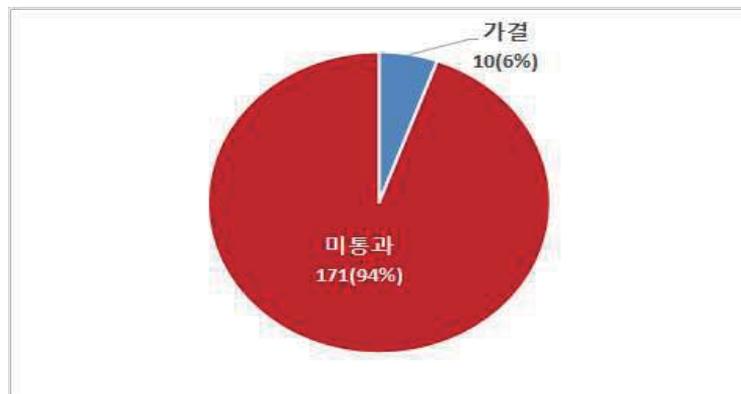
제 2 장 분 석

공적부조 법안 50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 31개, 외교통일위원회 9개, 정부위원회 4개, 여성가족위원회 3개, 법제사법위원회 2개, 국방위원회 1개 순으로 나타났다.

3-2. 사회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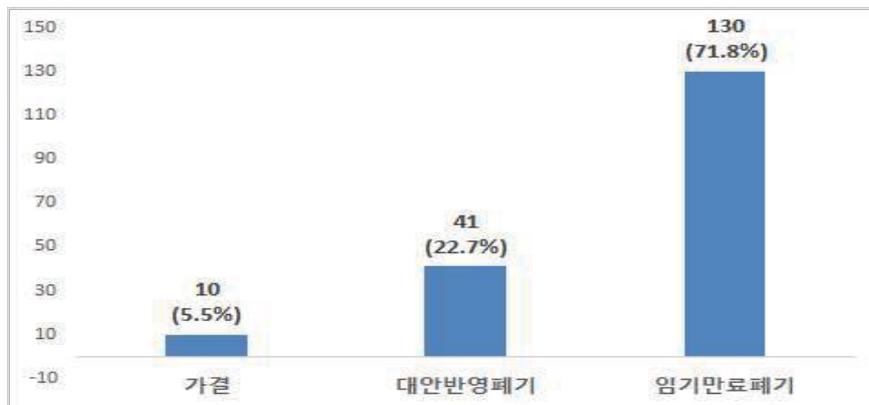
1) 사회보험 법안 가결여부

<그림 2-74> 사회보험 가결여부(n=181)



사회보험 181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10개(6%) 이었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171개(9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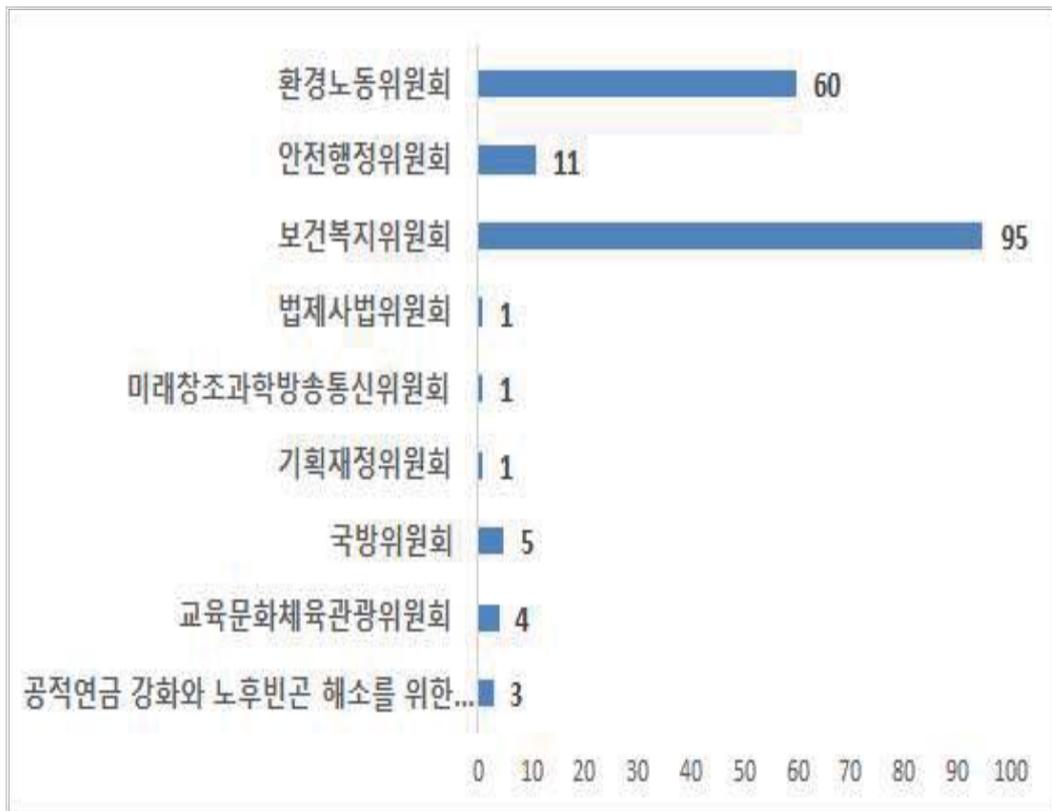
<그림 2-75> 사회보험 가결여부(유형별, n=181)



사회보험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130개(71.8%), 대안반영폐기 41개(22.7%), 가결 10개(5.5%) 순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보험 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76> 사회보험 소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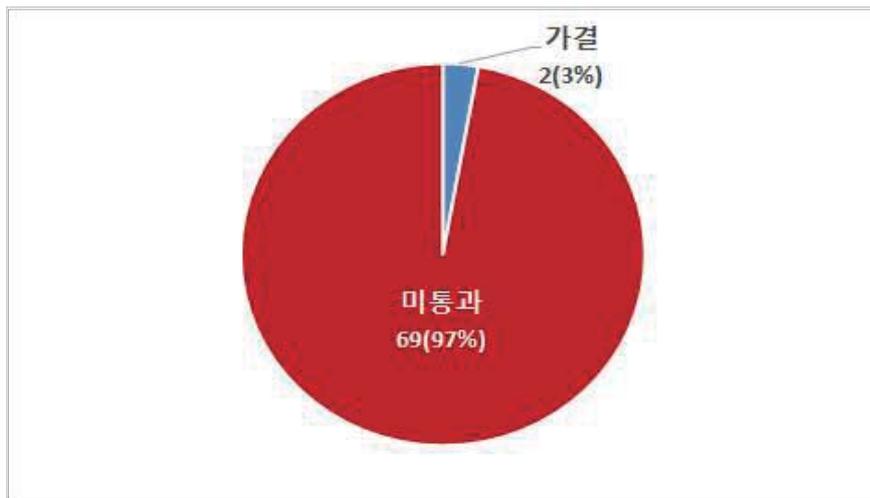


사회보험 법안 181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 95개, 환경노동위원회 60개, 안전행정위원회 11개, 국방위원회 5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개 순으로 나타났다.

3-3. 사회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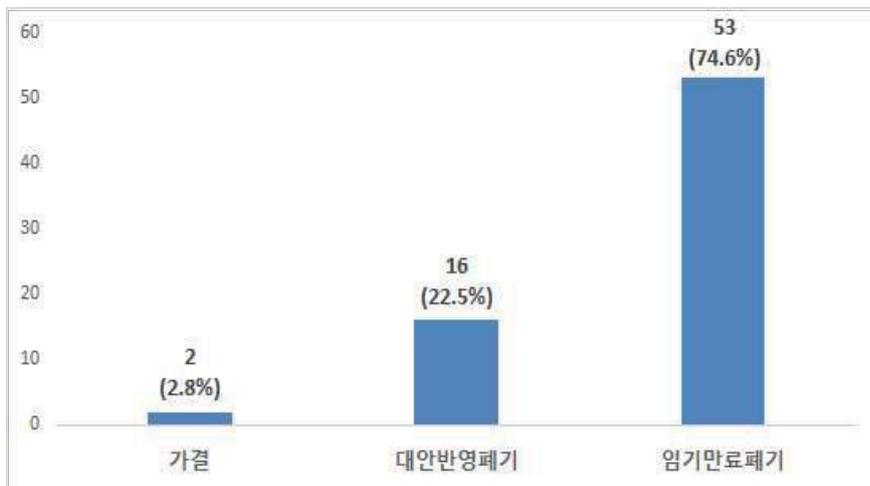
1) 사회복지서비스 법안 가결여부

<그림 2-77> 사회복지서비스 가결여부(n=71)



공적부조 71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2개(3%) 이었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69개(9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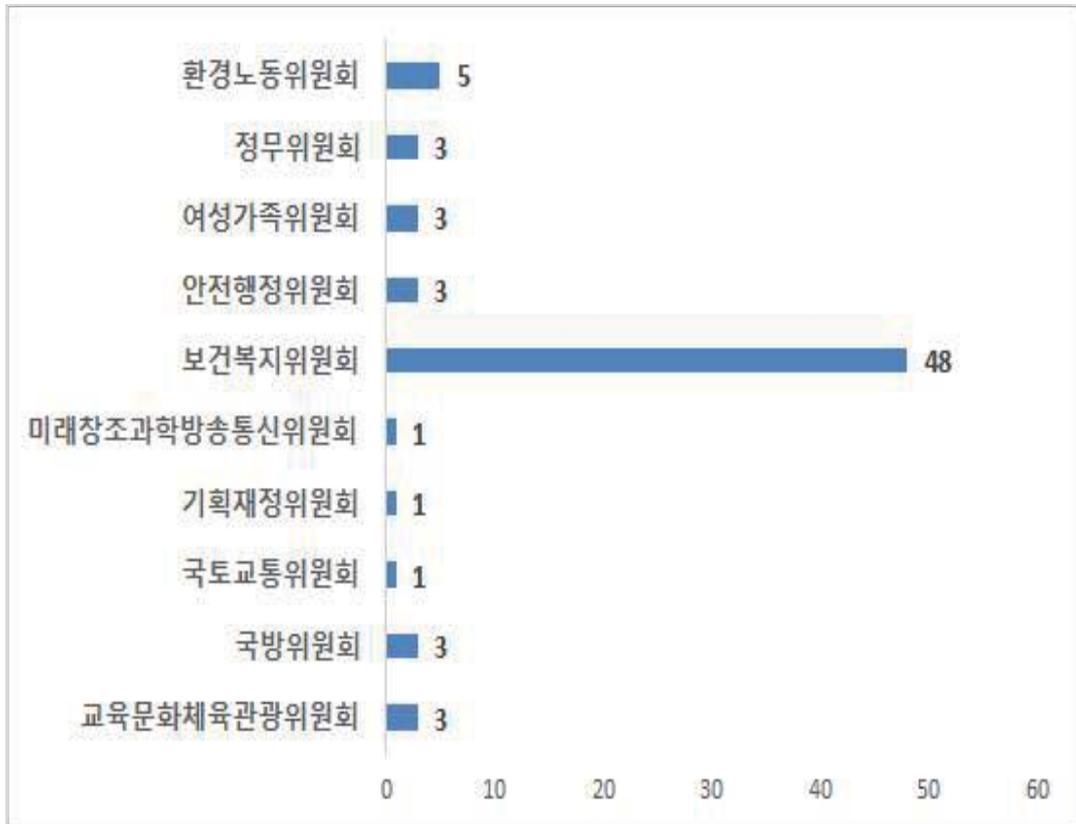
<그림 2-78> 사회복지서비스 가결여부(유형별, n=71)



사회복지서비스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53개(74.6%), 대안반영폐기 16개(22.5%), 가결 2개(2.8%)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서비스 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79> 사회복지서비스 소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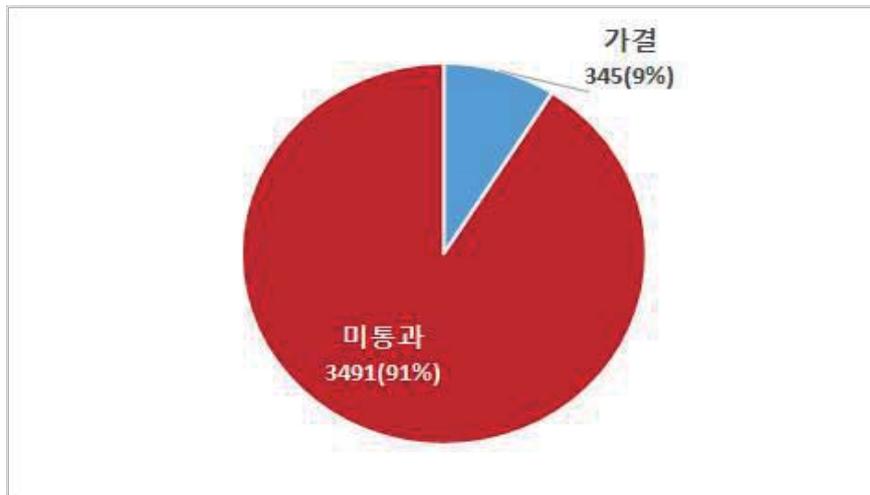


사회복지서비스 법안 71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 48개, 환경노동위원회 5개,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3개 순으로 나타났다.

4. 사업법안 입법동향[n=3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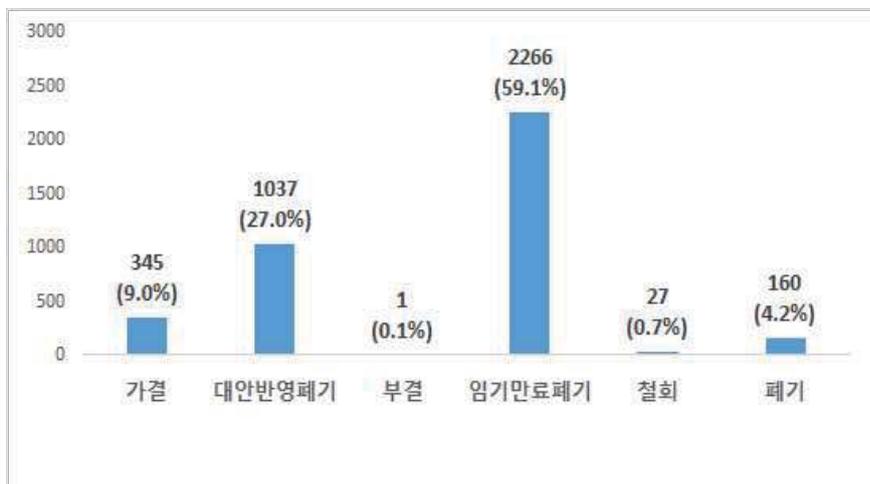
1) 사업법안 가결여부

<그림 2-80> 사업법안 가결여부(n=3836)



사업법안 3836개 중 가결된 법안은 345개(9%)였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3491개(9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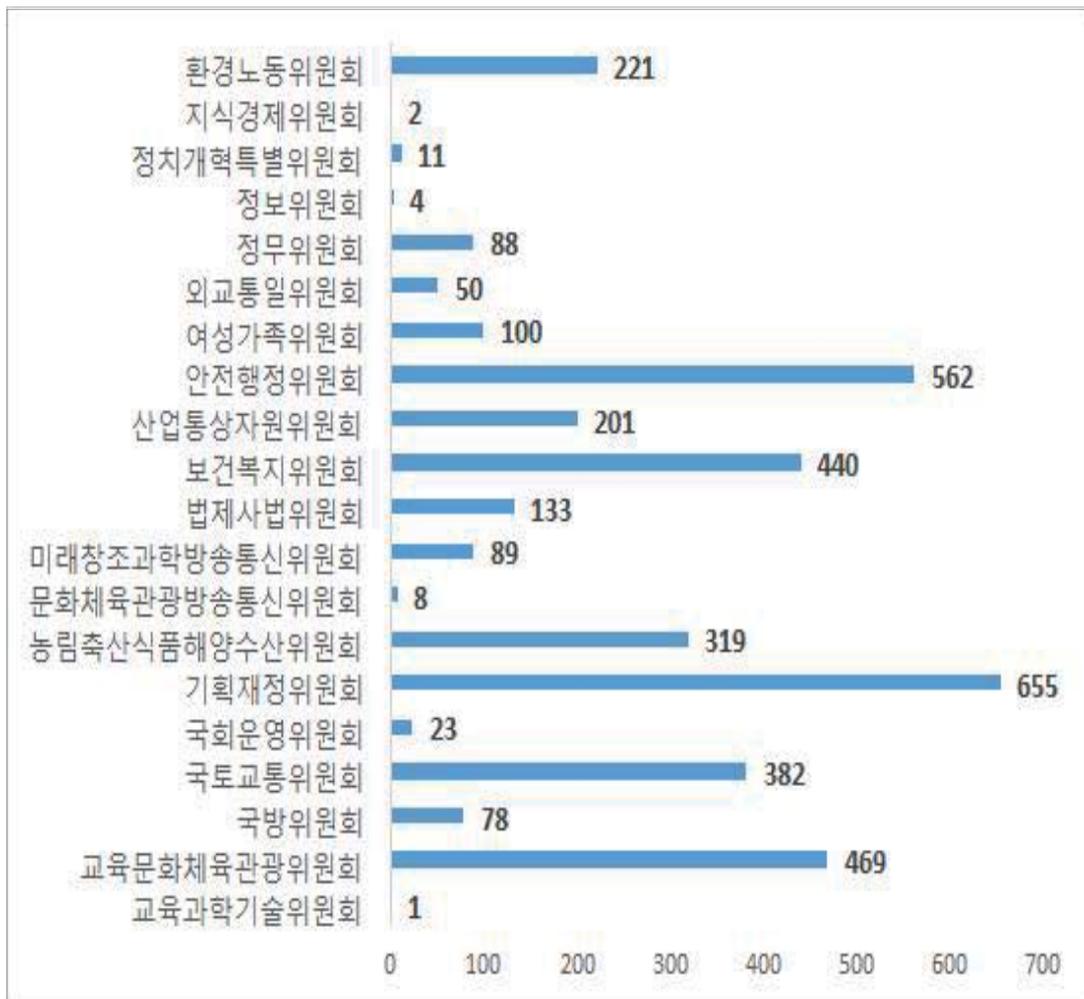
<그림 2-81> 사업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3836)



사업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2266개 (59.1%), 대안반영폐기 1037개(27.0%), 가결 345개(9.0%) 순으로 나타났다.

2) 사업법안 소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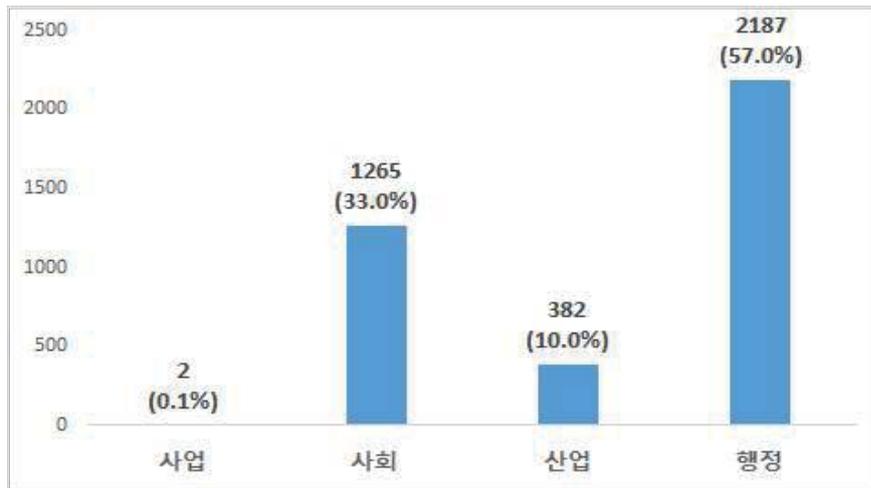
<그림 2-82> 사업법안 소관위원회(n=3836)



사업법안 3836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655개, 안전행정위원회 562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69개, 보건복지위원회 440개 순으로 나타났다.

3) 사업법안 세부유형

<그림 2-83> 사업법안 유형(n=3836)



사업법안 3836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이 2187개(57.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회 1265개(33.0%), 산업 382개(10.0%), 사업2개(0.1%)로 나타났다.

4-1. 사 업

<표 2-25> 사업법안 사업부문(n=2)

가결여부	가결	0
	미통과	2개 법안(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비용추계서 유/무	유	1개 법안
	무	1개 법안(미첨부사유서)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개 법안	
	안전행정위원회 1개 법안	

※ 사업법안 사업부문은 법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표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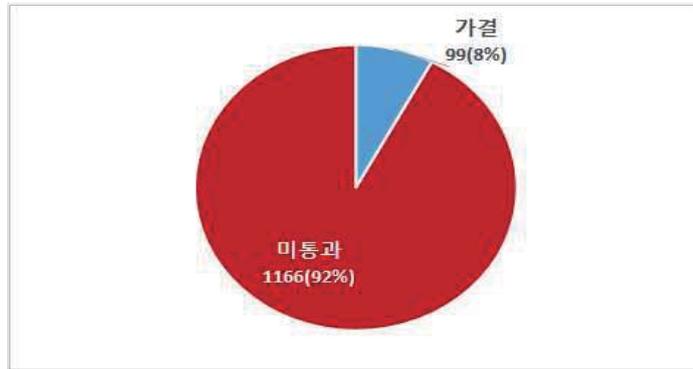
사업 2개 법안 모두 미통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개 법안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한 개의 법안은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소관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로 나타났다.

4-2.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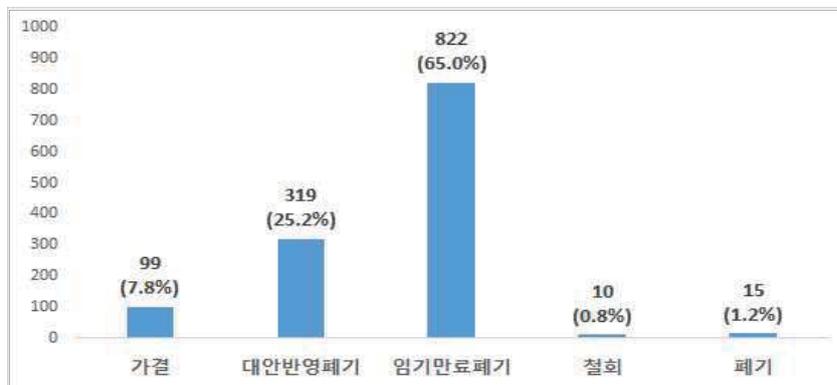
1) 사회법안 가결여부

<그림 2-84> 사회 가결여부(n=1265)



사회분야 1265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99개(8%) 이었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1166개(92%)로 나타났다.

<그림 2-85> 사회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1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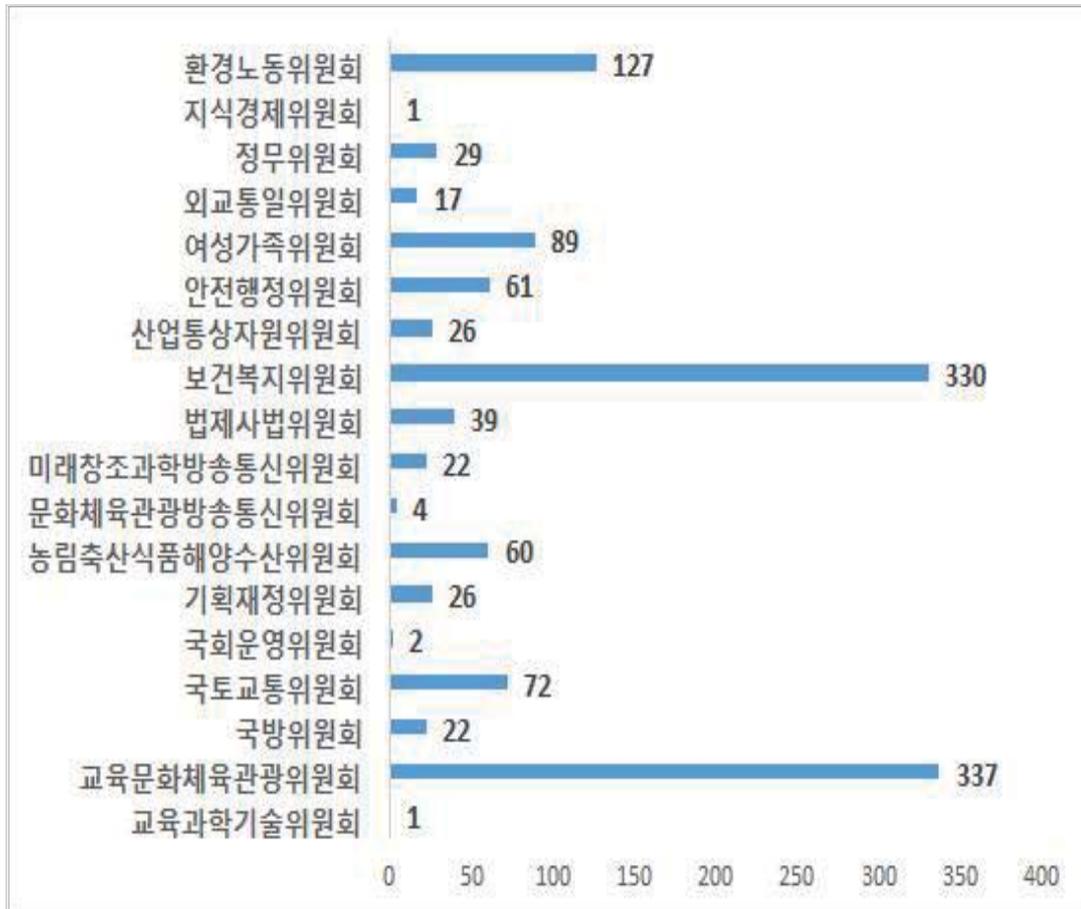


제 2 장 분 석

사회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822개 (65.0%), 대안반영폐기 319개(25.2%), 가결 99개(7.8%) 순으로 나타났다.

2) 사회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86> 사회법안 소관위원회(n=1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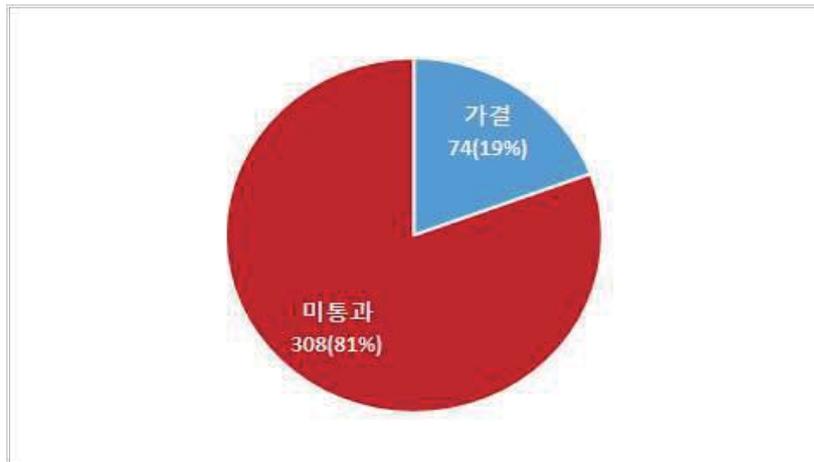


사회 법안 1265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37개, 보건복지위원회 330개, 환경노동위원회 127개, 여성가족위원회 89개, 국토교통위원회 72개, 안전행정위원회 61개 순으로 나타났다.

4-3. 산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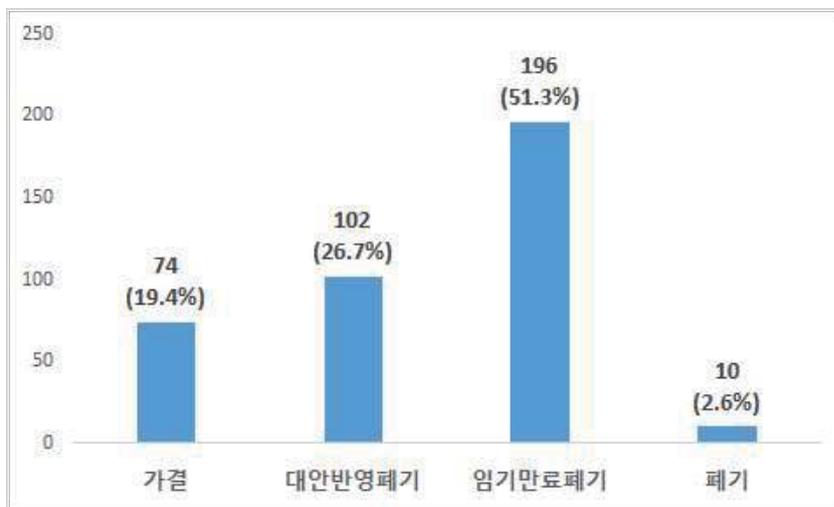
1) 산업법안 가결여부

<그림 2-87> 산업법안 가결여부(n=382)



산업분야의 382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74개(19%)이었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308개(81%)로 나타났다.

<그림 2-88> 산업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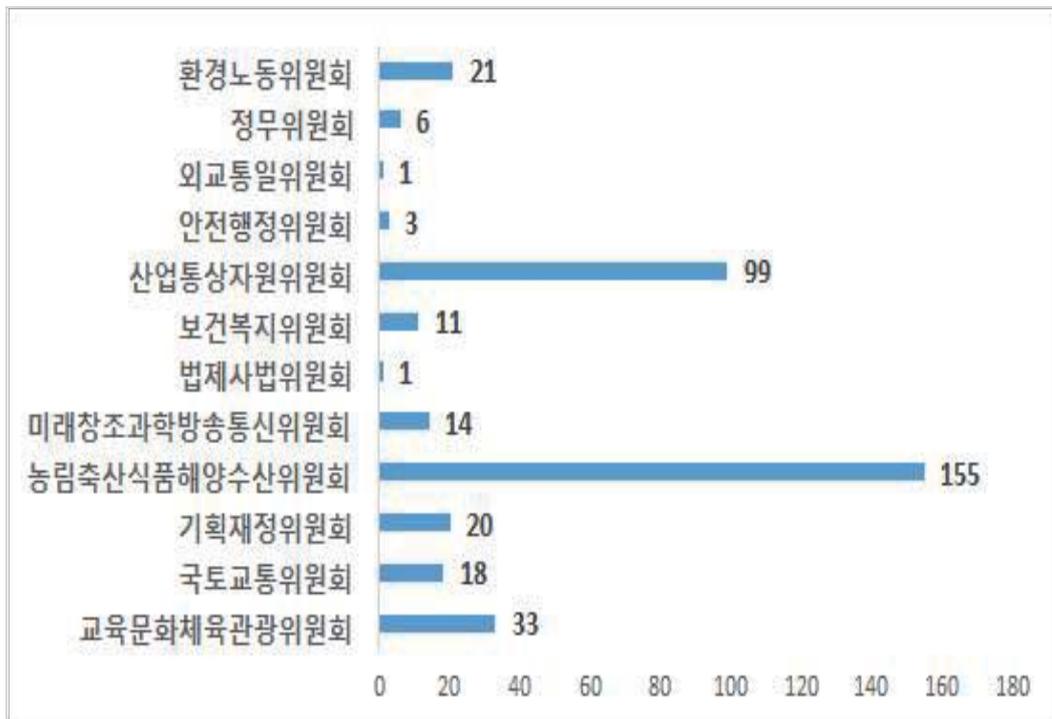


제2장 분석

산업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196개 (51.3%), 대안반영폐기 102개(26.7%), 가결 74개(19.4%) 순으로 나타났다.

2) 산업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89> 산업법안 소관위원회(n=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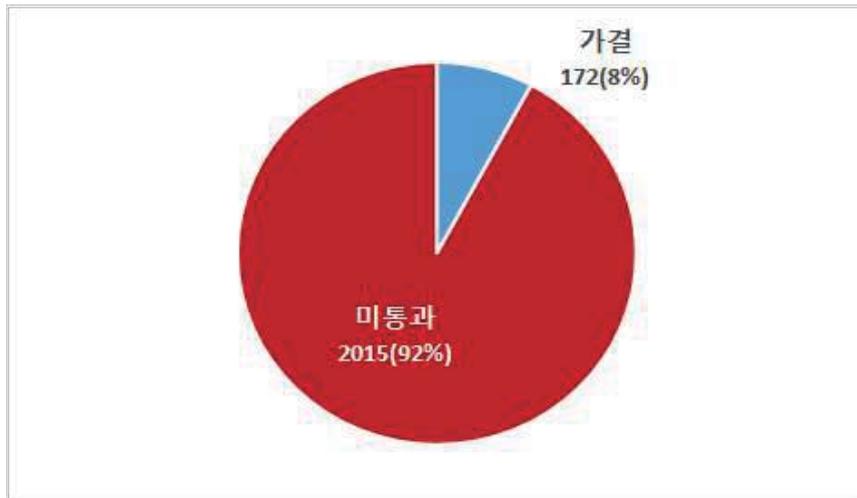


산업 법안 382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55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99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3개, 환경노동위원회 21개 순으로 나타났다.

4-4.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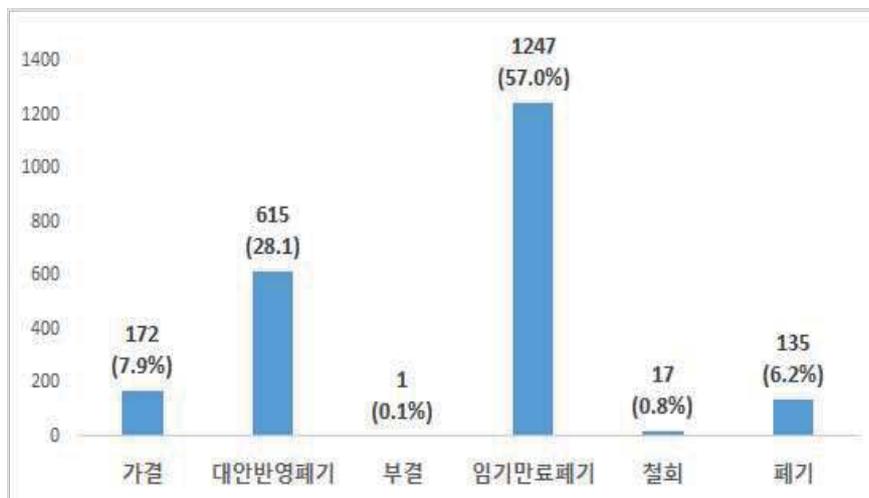
1) 행정법안 가결여부

<그림 2-90> 행정법안 가결여부(n=2187)



행정의 2187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172개(8%)이었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2015개(92%)로 나타났다.

<그림 2-91> 행정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2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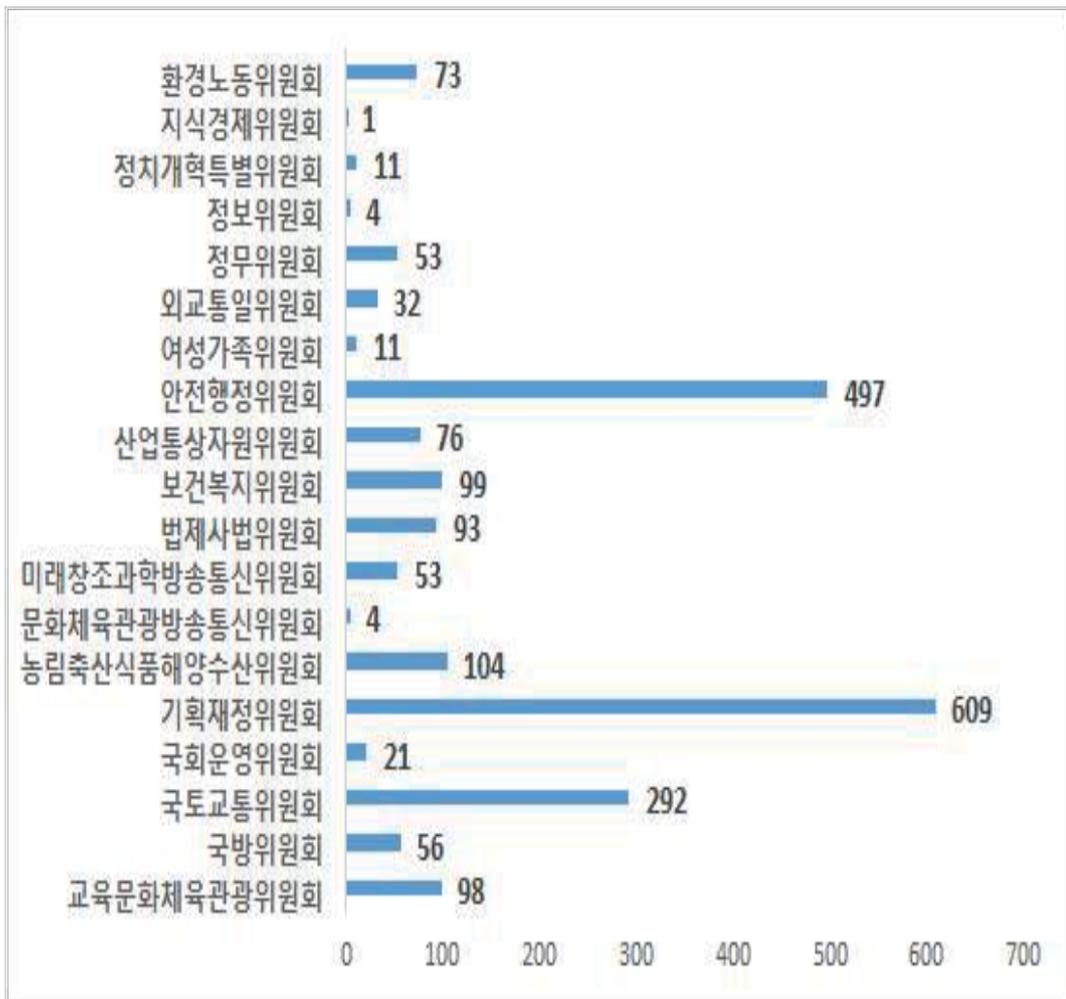


제2장 분석

행정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1247개(57.0%), 대안반영폐기 615개(28.1%), 가결 172개(7.9%) 순으로 나타났다.

2) 행정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92> 행정법안 소관위원회(n=2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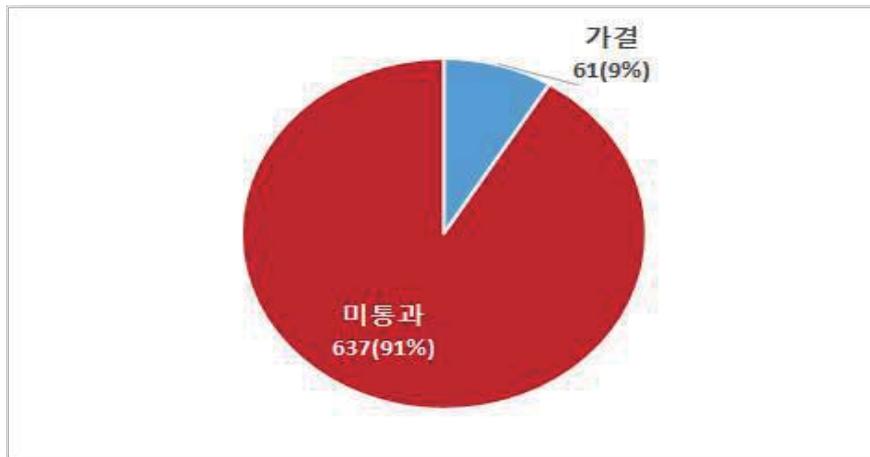


행정 법안 2187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609개, 안전행정위원회 497개, 국토교통위원회 292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4개, 보건복지위원회 99개 순으로 나타났다.

5. 조직법안 입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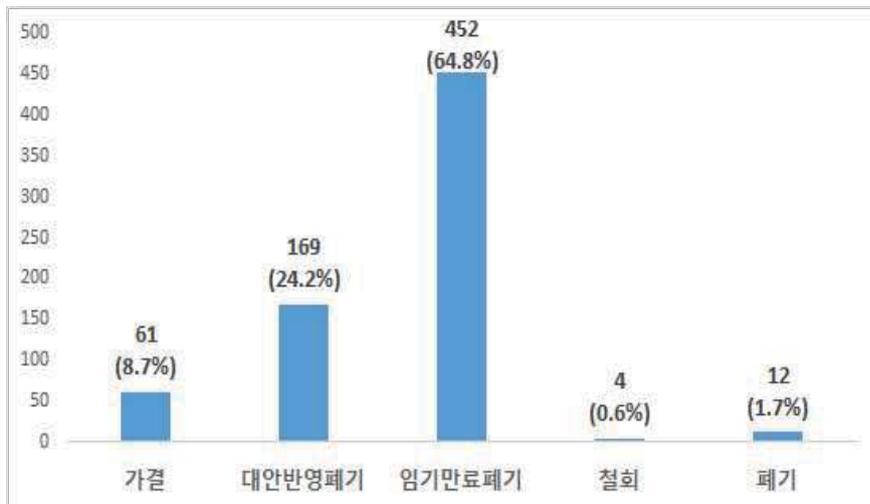
1) 조직법안 가결여부

<그림 2-93> 조직법안 가결여부(n=698)



조직법안 698개 중 가결된 법안은 61개(9%)였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637개(91%)로 나타났다.

<그림 2-94> 조직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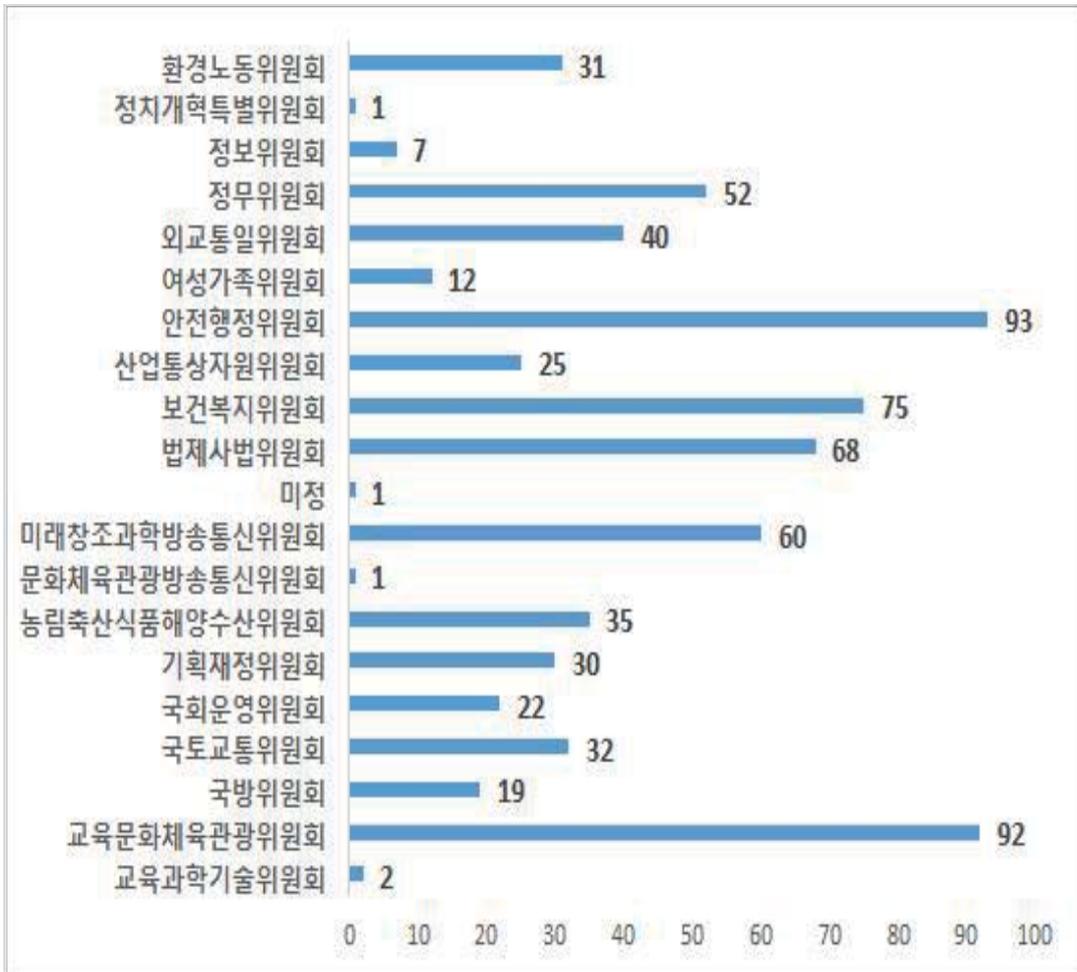


제2장 분석

조직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452개 (64.8%), 대안반영폐기 169개(24.2%), 가결 61개(8.7%)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직법안 소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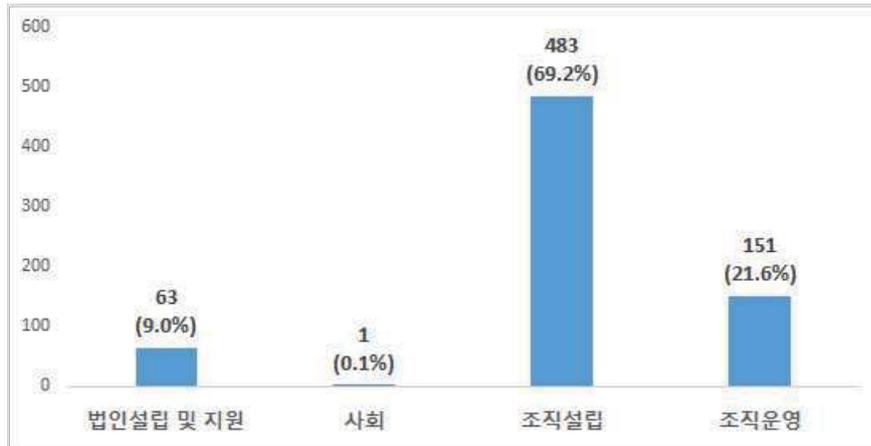
<그림 2-95> 조직법안 소관위원회(n=698)



조직법안 698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안전행정위원회 93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92개, 보건복지위원회 75개, 법제사법위원회 68개 순으로 나타났다.

3) 조직법안 세부유형

<그림 2-96> 조직법안 유형(n=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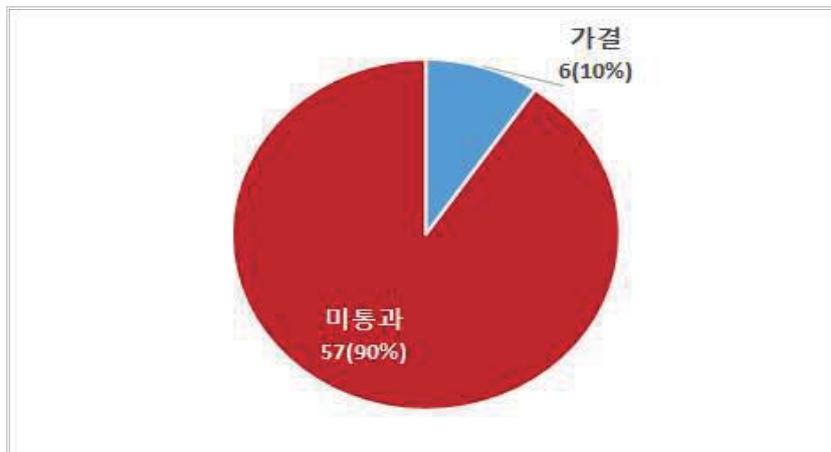


조직법안 698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설립 483개(69.2%), 조직 운영 151개(21.6%), 법인설립 및 지원 63개(9.0%)로 나타났다.

5-1. 법인설립 및 지원[n=63]

1)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 가결여부

<그림 2-97>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 가결여부(n=63)



제2장 분석

법인설립 및 지원 63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6개(10%)이었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57개(90%)로 나타났다.

<그림 2-98>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63)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32개(50.8%), 대안반영폐기 24개(38.1%), 가결 6개(9.5%) 순으로 나타났다.

2)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99>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 소관위원회(n=63)



법인설립 및 지원 법안 63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개, 안전행정위원회 10개, 외교통일위원회 8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7개, 보건복지위원회 6개 순으로 나타났다.

5-2. 사 회[n=1]

<표 2-26> 조직법안 사회부문(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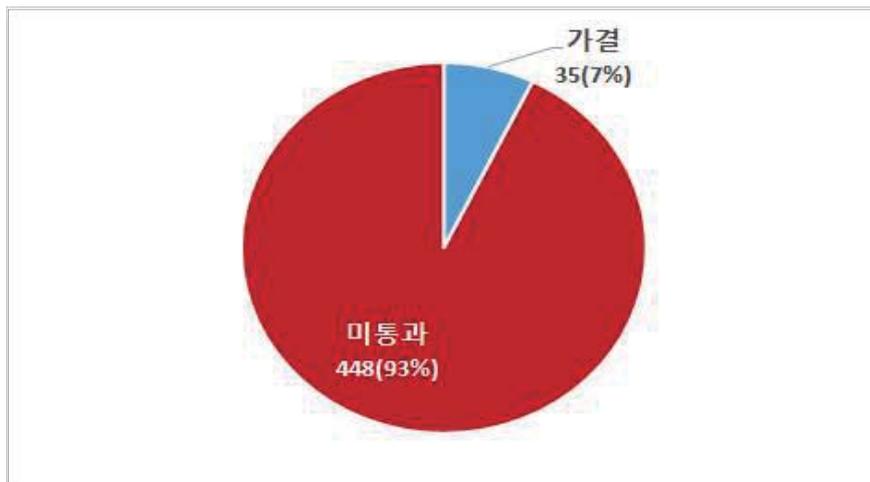
가결여부	미통과(임기만료폐기)
비용추계서 유/무	미첨부사유서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직법안 사회부문은 법안이 한 개이기 때문에 표로 대체

5-3. 조직설립[n=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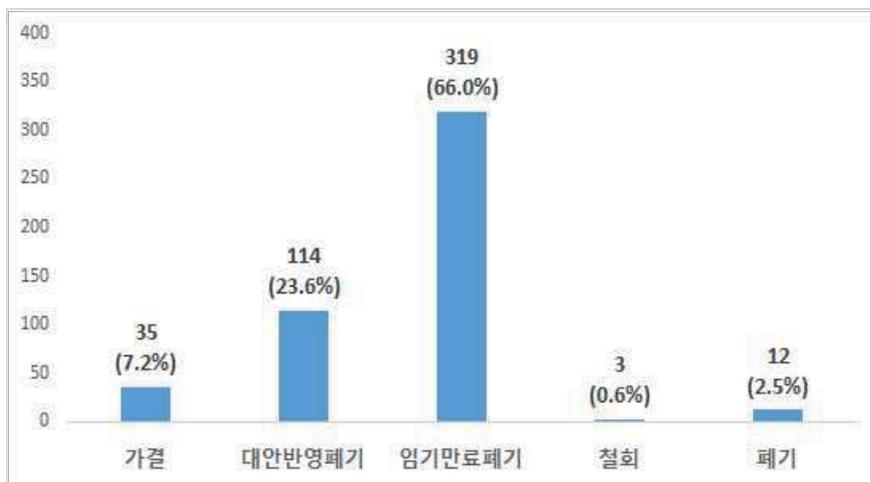
1) 조직설립 법안 가결여부

<그림 2-100> 조직설립 법안 가결여부(n=483)



조직설립의 483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35개(7%)이었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448개(9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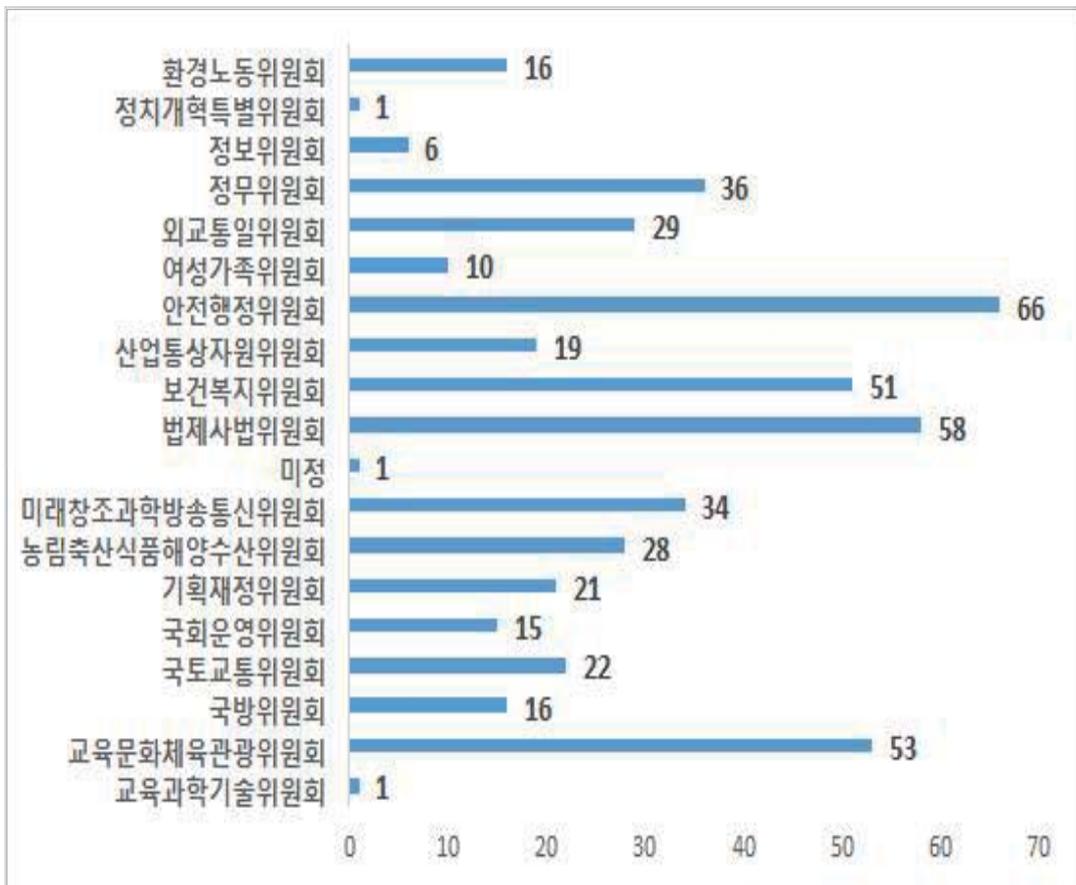
<그림 2-101> 조직설립 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483)



조직설립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319개(66.0%), 대안반영폐기 114개(23.6%), 가결 35개(7.2%)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직설립 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102> 조직설립 법안 소관위원회(n=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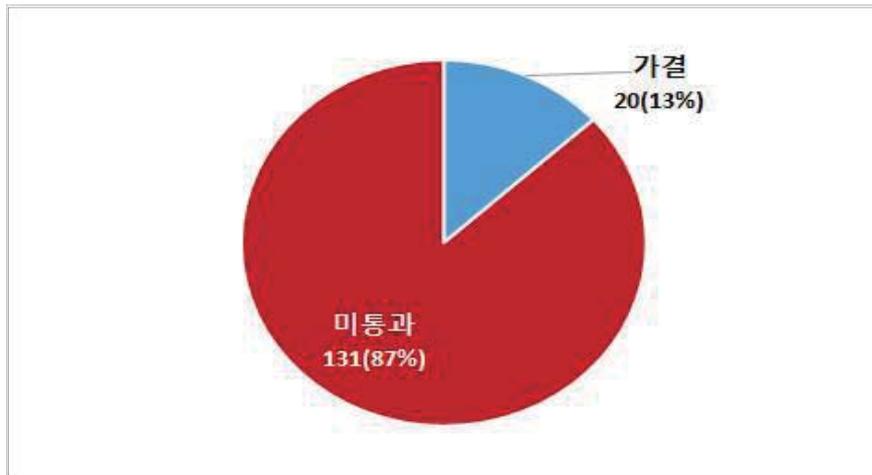


조직설립 법안 483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안전행정위원회 66개, 법제사법위원회 58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3개, 보건복지위원회 51개 순으로 나타났다.

5-4. 조직운영[n=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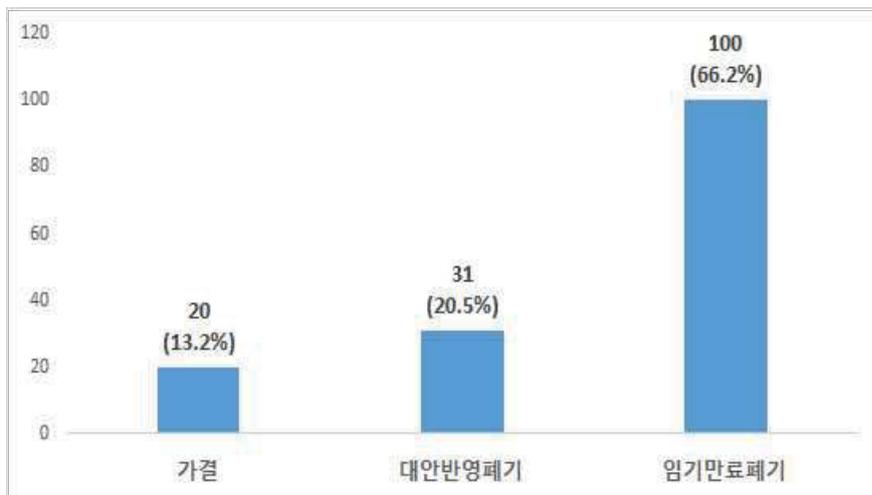
1) 조직운영 법안 가결여부

<그림 2-103> 조직운영 법안 가결여부(n=151)



조직운영의 151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20개(13%)이었으며, 미통과된 법안은 131개(8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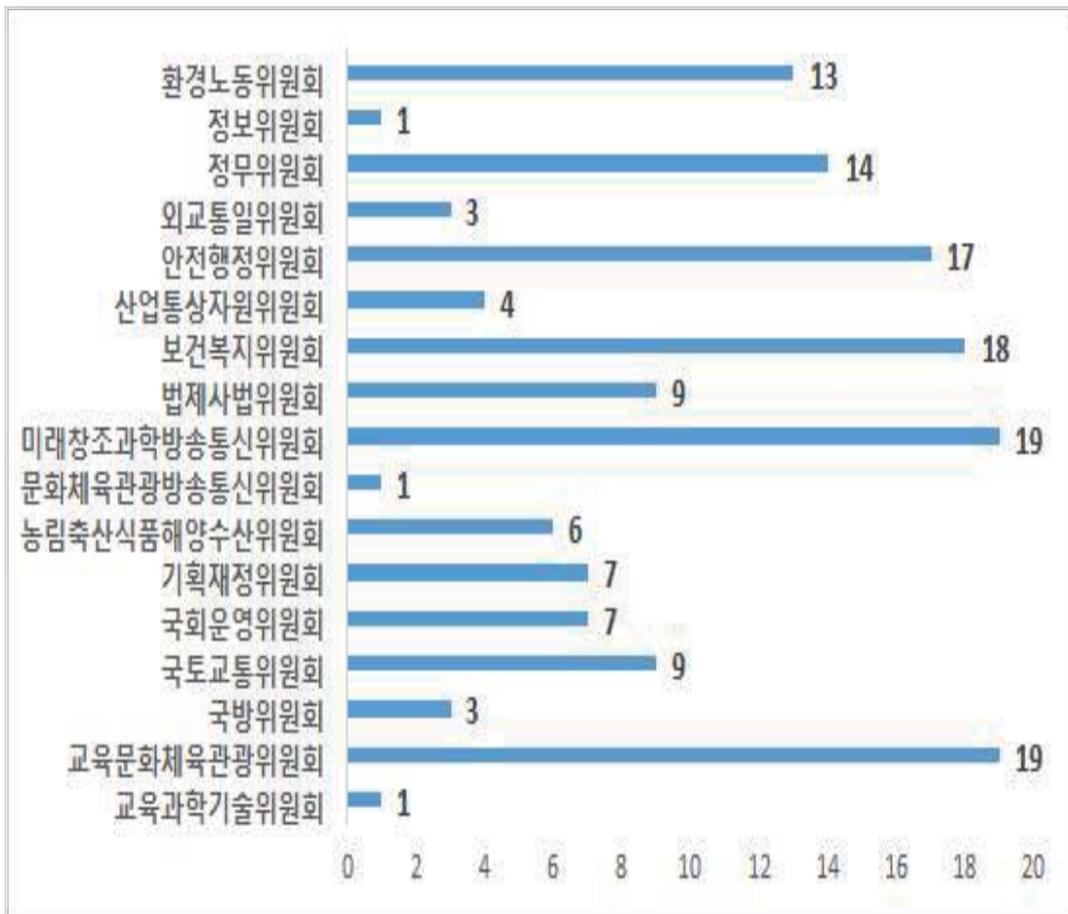
<그림 2-104> 조직운영 법안 가결여부(유형별, n=151)



조직운영 법안의 가결여부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100개(66.2%), 대안반영폐기 31개(20.5%), 가결 20개(13.2%)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직운영 법안 소관위원회

<그림 2-105> 조직운영 법안 소관위원회(n=151)



조직운영 법안 151개의 소관위원회를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19개, 보건복지위원회 18개, 안전행정위원회 17개, 정무위원회 14개 순으로 나타났다.

6. 소 결

1) 19대 국회 제출 재정수반법안의 전체 동향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사업법안이다. 사업법안은 전체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5055건 중 3836건을 차지하여 76%의 비율을 나타냈다. 사업법안에 이어 조직법안이 698건으로 14%, 보장법안이 302건으로 6%, 보상법안이 219건으로 4%를 차지하고 있다.

2) 보상법안 동향

보상법안은 19대 국회에 발의된 재정수반법안 중 4.3%(219)를 차지한다. 이중 11개 법안이 가결되어 5%의 가결율을 나타낸다. 미통과된 208개의 법안 중 대부분인 159건(72.6%)의 법안이 임기만료폐기되었고, 41건(18.7%)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75개의 보상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이어 44개의 법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보상법안은 세부적으로 위로보상이 91건(41.6%), 공로보상이 85건(38.8%), 손실보상이 43건(19.6%)로 분류된다.

보상법안 중 공로보상 법안은 총 85건으로 이중 3건이 가결되어 가결율은 4%로 평균 가결율을 상당히 하회하고 있으며, 미통과된 82건(96%)의 법안 중 67건(78.8%)이 임기만료폐기, 11건(12.9%)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85건의 공로보상법안 중 60건이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법안 중 손실보상 법안은 43건(19.6%)으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1건이 가결되어 2%의 매우 낮은 가결율을 나타내고, 28건(65.1%)의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손실보상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에 각 8건이 제

출되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산재되어 제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위로보상 법안은 총 91개(41.6%)로 보상법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7건(8%)의 법안이 통과되어 평균 가결율을 상회하는 가결율을 보여주고 있다. 91개 법안 중 64건(70.3%)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33건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었고, 기타 정무위원회에 14건, 국방위원회에 13건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3) 보장법안 동향

보장법안은 19대 국회에서 302건이 발의되어 재정수반법안의 6.0%를 차지한다. 이중 13건의 법안이 가결되어 평균에 못 미치는 4%의 가결율을 나타낸다. 미통과된 289개의 법안 중 대부분인 217건(71.9%)의 법안이 임기만료폐기 되었고, 69건(22.8%)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보장법안 중 대부분인 174건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어 65건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보장법안 중 사회보험법안이 181건(59.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이어 사회복지서비스법안이 71건(23.5%), 공적부조법안이 50건(16.6%)으로 나타났다.

50건의 공적부조법안 중 1개의 법안만이 가결되어 2%의 매우 낮은 가결율을 나타내고, 34건(68.0%)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공적부조법안 중 가장 많은 수인 31건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보장법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회보험법안(181건) 중 10건이 가결되어 평균 수준인 6%의 가결율을 보인다. 사회보험법안 중 130건(71.8%)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41건(22.7%)이 대안반영폐기 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장 많은 95건의 사회보험법안이 제출되었고, 이어 60건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법안(71건) 중 2건이 가결되어 3%의 매우 낮은 가결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법안(74.6%)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대

부분의 법안(48건)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다.

4) 사업법안 동향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재정수반법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법안은 총 3836건이 제출되어, 345건이 가결되었으며 평균 가결율을 상회하는 9%의 가결율을 보여준다. 2266건(59.1%)의 사업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1037건(27.0%)이 대안반영으로 폐기되었다. 사업법안이 제출된 소관위원회는 매우 다양하여 655건이 기획재정위원회, 562건이 안전행정위원회, 469건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40건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법안은 다시 내용적으로 2187건의 행정분야법안(57.0%), 1265건의 사회분야법안(33.0%), 382건 산업분야법안(10.0%)으로 구분된다.

사회분야법안은 총 1265건(33.0%)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99건(8%)이 가결되어 평균을 상회하는 가결율을 보여준다. 1166개의 미통과된 사회분야법안 중 822건(65.0%)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319건(25.2%)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사회분야법안은 가장 많은 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337건)와 보건복지위원회(330건)에 제출되었다.

사업법안 중 산업분야법안은 모든 분류에서 가장 높은 가결율을 보인다. 발의된 382건의 산업분야법안 중 74건이 가결되어 19%의 가결율로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나아가 196건(51.3%)이 임기만료폐기, 102건(26.7%)이 대안반영폐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수인 155건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99건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사업법안 중 행정분야법안은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재정수반법안 중 많은 법안이다. 총 2187건이 발의되어 172건이 가결되었으며, 평균을 상회하는 8%의 가결율을 나타낸다. 미통과된 법안 중 1247건(57.0%)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615건(28.1%)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나

아가 135건(6.2%)가 폐기되어 모든 분류에서 가장 높은 폐기율을 나타낸다. 가장 많은 609건의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497건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었다.

5) 조직법안 동향

마지막으로 조직법안은 총 698건이 발의되어 이중 61건(9%)이 가결되었다. 미통과된 법안 중 452건(64.8%)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169건(24.2%)이 대안반영폐기 되었다. 조직법안은 매우 다양한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 중 93건이 안전행정위원회에, 92건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75건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조직법안은 그 내용에 따라 다시 483건의 조직설립법안(69.2%), 151건의 조직운영법안(21.6%) 그리고 63건의 법인설립 및 지원법안(9.0%)로 분류된다.

발의된 법인설립 및 지원법안 63건 중 6건(10%)이 가결되어 평균 가결율을 상회하는 가결율을 보여준다. 미통과 된 법안 중 32건(50.8%)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4건(38.1%)이 대안반영폐기되어, 모든 분류에서 가장 낮은 임기만료폐기율과 가장 높은 대안반영폐기율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19건의 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조직법안 중 조직설립법안은 483건이 발의되었고 이중 35건(7%)이 가결되었으며, 319건(66.0%)이 임기만료로, 114건(23.6%)이 대안반영폐기 되었다. 관여 소관위원회는 매우 다양하여 66건이 안전행정위원회에, 58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53건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총 151건이 제출된 조직운영법안은 20건이 통과 되어 13%의 높은 가결율을 보여준다. 100건(66.2%)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31건(20.5%)이 대안반영폐기 되었다. 법안이 제출된 소관위원회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19건이 각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되었다.

IV. 결론 : 종합분석

1. 법안 내용에 따른 유형별 입법동향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사업법안이다. 사업법안은 전체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5055건 중 3836건을 차지하여 76%의 비율을 나타냈다. 사업법안에 이어 조직법안이 698건으로 14%, 보장법안이 302건으로 6%, 보상법안이 219건으로 4%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항목별 분류에서는 사업법안 중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행정법안이 2187건으로 가장 많은 수로 제출되었다. 이에 이어 사업법안 중 교육 및 보건·복지·노동, 문화·체육·관광,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법안이 1265건 제출되었다. 재정수반법안 중 이 두 영역의 법안이 3462건으로 총 제출법안 중 약 68%를 넘어선다.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제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유형																
분류	전체법안(n=5055)				보상법안(n=219)			보장법안(n=302)			사업법안(n=3836)				조직법안(n=698)			
	보상 법안	보장 법안	사업 법안	조직 법안	공로 보상	손실 보상	위로 보상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사회 복지	사업	사회	산업	행정	법인 설립	사회	조직 설립	조직 운영
제출 법안	219	302	3836	698	85	43	91	50	181	71	1	1265	382	2187	63	1	483	151
비율 (%)	4%	6%	76%	14%	39%	20%	42%	17%	60%	24%	1%	33%	10%	57%	9%	1%	69%	22%

2. 법안 내용에 따른 유형별 가결동향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5055건의 재정수반법안 중 430건이 가결되어 9%의 가결율을 나타냈다. 이는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안의 가결율인 15.7%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가결율이 가장 높은 법안 유형은 사업법안과 조직법안으로 9%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외에 보상법안이 5%, 보장법안이 4%로 나타났다.

미통과 된 법안 중 3094건(61.2%)이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으며, 1316건(26.0%)이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과반수이상이 소관위원회에서의 미진한 심리 끝에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재정수반법안 중 가장 높은 가결율을 보인 유형은 사업법안 중 산업분야 법안으로 19%의 가결율을 나타내어 전체 가결율을 상회하고 있다. 나머지 법안의 경우에는 모두 전체 가결율인 15.7%에 미치지 못하였다.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가결현상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유형																
분류	전체법안(n=5055)				보상법안(n=219)			보장법안(n=302)			사업법안(n=3836)				조직법안(n=698)			
	보상 법안	보장 법안	사업 법안	조직 법안	공로 보상	손실 보상	위로 보상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사회 복지	사업	사회	산업	행정	법인 설립	사회	조직 설립	조직 운영
제출 법안	219	302	3836	698	85	43	91	50	181	71	1	1265	382	2187	63	1	483	151
가결 법안	11	13	345	61	3	1	7	1	10	2	0	99	74	172	6	0	35	20
비율 (%)	5%	4%	9%	9%	4%	2%	8%	2%	6%	3%	0%	8%	19%	8%	10%	0%	7%	13%

3. 해당 소관위원회 제출 동향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이 제출된 소관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총 713건의 재정수반법안이 제출되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중 사업법안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행정법안이 497건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 703건, 교통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690건의 재정수반법안이 제출되었다. 이외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573건, 국토교통위원회에 422건,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366건, 산업통산자원위원회 226건, 정무위원회 222건 등의 제출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9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3건, 지식경제위원회에 2건이 제출되는 등 상대적으로 아주 미비한 제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수반법안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안전행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해당 소관위원회 제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유형														계
	보상법안			보장법안			사업법안				조직법안				
	공로 보상	손실 보상	위로 보상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사회 복지	사업	사회	산업	행정	법인 설립	사회	조직 설립	조직 운영	
환경노동위원회	·	2	5	·	60	5	·	127	21	73	2	·	16	13	324
지식경제위원회	·	·	·	·	·	·	·	1	·	1	·	·	·	·	2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	·	·	·	·	·	11	·	·	1	·	12
정보위원회	·	·	·	·	·	·	·	·	·	4	·	·	6	1	11

IV. 결론 : 종합분석

구 분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유형														계
	보상법안			보장법안			사업법안				조직법안				
	공로 보상	손실 보상	위로 보상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사회 복지	사업	사회	산업	행정	법인 설립	사회	조직 설립	조직 운영	
정무위원회	60	1	14	4	·	3	·	29	6	53	2	·	36	14	222
외교통일위원회	·	3	1	9	·	·	·	17	1	32	8	·	29	3	103
여성가족위원회	·	1	5	3	·	3	·	89	·	11	2	·	10	·	124
안전행정위원회	8	3	33	·	11	3	1	61	3	497	10	·	66	17	71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	·	·	·	·	·	26	99	76	2	·	19	4	226
보건복지위원회	1	8	5	31	95	48	·	330	11	99	6	·	51	18	703
법제사법위원회	·	·	8	2	1	·	·	39	1	93	1	·	58	9	212
미래창조과학방송 통신위원회	1	·	·	·	1	1	·	22	14	53	7	·	34	19	152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	·	·	·	·	·	·	·	4	·	4	·	·	·	1	9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1	8	3	·	·	·	·	60	155	104	1	·	28	6	366
기획재정위원회	·	3	·	·	1	1	·	26	20	609	2	·	21	7	690
국회운영위원회	1	·	·	·	·	·	·	2	·	21	·	·	15	7	46
국토교통위원회	1	6	·	·	·	1	·	72	18	292	1	·	22	9	422
국방위원회	10	8	13	1	5	3	·	22	·	56	·	·	16	3	13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	3	·	4	3	1	337	33	98	19	1	53	19	57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	·	·	·	·	·	1	·	·	·	·	1	1	3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	·	·	·	3	·	·	·	·	·	·	·	·	·	3
미 정	·	·	1	·	·	·	·	·	·	·	·	·	1	·	2
계	85	43	91	50	181	71	2	1265	382	2187	63	1	483	151	5055

4. 법안 내용에 따른 유형별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총 5055건 중 1124건으로 22.3%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보다 거의 3배가 많은 3085건(61%)의 법안이 비용추계서가 아닌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다. 이외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법안이 372건(7.4%)으로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혹은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다.

재정수반법안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35호)」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미첨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동조항의 제3호에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 하여 포괄적 면제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위의 미첨부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경우 비용추계제도의 엄격한 시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경우보다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비용추계서 첨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유형														계 (%)
	보상법안			보장법안			사업법안				조직법안				
비용추계서첨부 여부	공로 보상	손실 보상	위로 보상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사회 복지	사업	사회	산업	행정	법인 설립	사회	조직 설립	조직 운영	
비용추계서 첨부	44	4	31	12	62	27	1	251	58	453	17	·	132	32	1124 (22.3)
미첨부사유서 첨부	31	31	49	32	91	37	1	822	260	1306	33	1	300	91	3085 (61)

IV. 결론 : 종합분석

구 분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 유형														계 (%)
	보상법안			보장법안			사업법안				조직법안				
	공로 보상	손실 보상	위로 보상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사회 복지	사업	사회	산업	행정	법인 설립	사회	조직 설립	조직 운영	
비용추계서첨부 여부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6	4	6	1	14	·	·	81	19	182	9	·	34	16	372 (7.4%)
상 정	·	·	1	·	·	·	·	4	4	5	·	·	1	·	15 (0.3)
세수추계서	·	·	·	·	·	·	·	·	·	2	·	·	·	·	2 (0)
없 음	4	4	4	5	14	7	·	107	41	239	4	·	16	12	457 (9)
계	85	43	91	50	181	71	2	1265	382	2187	63	1	483	151	5055 (100)

참 고 문 헌

- 국회예산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실제 : 지출편 -, 2012.
- 김수옥, 법안비용추계 미첨부 요건 강화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1.
- 임명현, 입법관리의 실태 및 효율화 방안, 법제연구 통권 제27호, 2004.
- 정영진,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의회학회보 제2호, 2012.